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9
4	讲义	67
5	퀴즈	91
6	토론	95
7	자료	97





## 학습안내

### 01

#### 과목소개

<한국 수산업 발전사>는 한국의 수산업과 발달과정을 어업법 형성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교과목이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에서 공유재인 수산자원의 소유권 형성과 그 실태, 그리고 근대적 형태로 법제화 되는 일련의 과정과 그 시사점을 학습할 수 있다.

### 02

#### 학습목표

- (1) 조선시대부터 식민지기까지 어업권이 현대의 수산업법의 형태로 이행되는 역사적 과정을 학습한다.
- (2) 근대적 어업권 제도 도입 이후 전통적 어업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식민지기수산업의 실태를 어업권 통계를 통해 학습한다.
- (3) 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국 수산업의 발전 단계를 학습한다.

### 03

#### 기대효과

이 강의를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유재인 전통적 어업권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한말과 식민지기를 거쳐 구래의 어업권이 현대의 수산업법의 형태로의 이행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사료를 통해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조선의 전통적 어업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어업권의 종류, 취득, 처분 등 어업권 통계로부터 당시 식민지기의 어업의 현황에 대해 실태적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 04

### 주차별 구성

1주차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
2주차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
3주차	한말(韓末)의 수산업과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
4주차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전통적 질서의 변화
5주차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어업권의 소유변동
6주차	수산업의 발전과 한국경제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4

주차

##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전통적 질서의 변화

### 4-1

### 한국 어업법의 도입 배경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수산업 발전사> 강좌를 맡은 송경은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한말(韓末)과 식민지기 근대적 어업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제도의 도입에 따른 당시 조선의 전통적 소유관계, 즉 전통적 질서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전 강의를 통해 한말(韓末)의 수산업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강의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수산지』로 해당 자료를 통해 근대적인 어업권 제도 도입 직전의 한말(韓末) 수산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말(韓末)의 수산업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수산자원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국 수산업 발전사의 네 번째 강의 주제인 근대적 어업법의 이행과 연결되는 고리라고 지난 강의에서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구한말(舊韓末) 어업법에서 식민지기 어업령으로 이어지는 한국에서의 수산 관련 기본법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히 첫 번째 강의에서 강조한 수산자원의 대표적 특징인 공유자원, 그리고 고갈의 위험성을 소유체계 즉 제도로써 관리하는 조치인 전용어업제도를 도입하는 부문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남윤씨가 망골도 지배 사례를 통해, 법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동체적 소유가 창출되는 일련의 과정과 특히 구래부터 존재하던 전통적 질서가 이를 수용하는 역사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성립한 것은 식민지기로, 「어업법」과 「어업령」을 기본법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근대적 어업권 제도'는 배타적으로 사점된 연안의 어장 혹은 자유접근이 가능하던 어장에 대해, 일물일권(一物一權)적 권리관계가 법정됨과 동시에 국가가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은 민법상의 용어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지칭합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식민지기에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구래의 전통적 어업 관행이 근대적 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조선의 연안에 공동체적 소유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성격의 소유관계가 식민지기에 법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이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어업법」과 「어업령」에서 규정된 근대적 어업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특히 「어업령」에서 어장의 권한 취득 주체를 공동체로만 제한한 '제6종 면허어업'의 도입과 이에 따른 어장 소유관계의 변화는 기존에 막연하게만 인식되어온 한국 역사 속 '어업공동체'의 실체를 명확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업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1908년에 제정된 「어업법」이 최초입니다. 「어업법(漁業法)」은 1902년부터 개정에 착수하고 있었던 당시 일본의 「구어업법(舊漁業法)」으로부터 기본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1889년 대한제국기, 일본에 조선해역어로권의 정식 통어(通漁)를 인정하였던 「조선일본양국통어장정(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이 도입된 이후, 일본 어부들에 의해 한국에 선진어업기술이 전파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즉 선진어업기술의 적용과 자원 이용 방식에 적합한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권리 규정이 필요한 시기였음은 분명합니다.

「어업법」은 본문 14개 조와 부칙 2개 조, 총 16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융희(隆熙) 2년 1908년 11월 11일자「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해 면허, 허가, 계출·쉬운 말로는 신고로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3개 부문으로의 어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말(韓末) 「어업법」제정 이전 수산업, 즉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권리 규정에 대한 사전 작업이 전무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1907년 「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이 그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동법 시행세칙 제1조에 의하면 “개간, 목축, 식수, 제염, 양어 등 사업을 위하여 국유미간지의 대여를 받은 자가 예정의 사업을 성공한 때는 농상공부대신은 그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부여함.”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유미간지이용법」초기 국유미간지의 범위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제염(製鹽)과 양어(養魚)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합법적 취득을 규정한 것이 동법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법은 관이 소유한 아직 개간되지 않은 토지인 관유미간지(官有未墾地), 주인이 없고 한번도 경작되지 않은 토지인 무주한 광지(無主閒曠地) 중 국방 소유의 미개간지가 개인의 개간에 의해 사유지화 되는 것을 방지, 즉 국유화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목적의 연속적 조치로 1908년 6월 29일 칙령 제39호 「궁내부귀속재산의 이속(移屬)에 관한 건」이 궁내부 소속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때 궁내부에 속해 있던 어장도 타 재산과 함께 국유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왕실 재산의 국유화조치라는 당시 배경하에 1908년 11월 「어업법」과 「어업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1908년 「어업법」과 1911년 「어업령」을 통해 한국은 종래와 구분되는 근대적인 어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어업법」이 통감부 하 일본의 관료들에 의해 일본의 「구어업법」을 차용하여 제정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단 법에 명시된 것과 별도로 「어업법」의 명목상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면, 1908년 9월 동법의 반포 이전에 한일통어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해 일본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에게 발송한 공한(公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에 있어서의 어업의 발달을 기도(期圖)하고 일한양국어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금반(今般) 한국정부로 하여금 어업에 관한 법규를 제정시행 시키려고 함”으로, 해당 문서를 통해 동법이 한국에 있어서 어업발달과 한일어민의 이익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본 어선의 조선해 통어는 1883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제41관의 규정에 의해 합법화되었습니다. 당시 「어업법」시행 직전에 1908년 10월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양국의 어업인이 상대 영토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고시되는 등, 일본 어민의 한국 진출은 순차적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업법」은 공포에 앞서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양국 어업인이 상대국 연해, 강, 만, 하천 및 호수에서 어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통어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일본인 통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한국으로의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팽창되는 인구의 확산, 자연자원의 확보 및 일본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 대륙 팽창적 대국화 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 1894년 「이민보호규칙(移民保護規則)」의 제정을 시작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업에 대해서는 1897년 「원양어업장려법」을 제정 공포하는 등, 조선해에 대한 통어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통어는 다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통어민은 영세어민이 주류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조난, 사고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통어시 어획물의 처리도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부패가 빠른 수산물의 특성상 본국인 일본으로의 운반 도중 어획물의 변질 우려가 있어, 무엇보다 조선 내에서 상품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어업 근거지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즉 대륙팽창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통어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전시와 자본주의의 부흥이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도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러일전쟁 이후 인구증가와 자본주의적 경제의 도입 및 발전으로 대만, 사할린 등으로 식민지 형태의 이주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일, 러일전쟁 등으로 군수식량 조달처로서 조선이 요지로 부상하였으며, 당시 일본은 조선을 적극적인 개발지로 주목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단순 통어가 아닌 이주, 즉 조선에 일본인 어촌 근거지를 만들고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시행된 「어업법」은 일본의 「구어업법」을 모방하여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이 근대적 어업권 제도를 통해 개인 또는 공동에게 배타적 어업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 일본인 이주어업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어업법」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는데, 어업법 제정은 1906년 9월에 공포한 「광업법」, 1907년 7월에 공포한 「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 1908년 1월에 공포한 「삼림법」 등과 더불어 구한말(舊韓末) 한반도에 자연자원에 대한 근대적 소유제도를 도입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어업법의 도입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업법과 어업권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4-2 어업법과 어업권 제도

지난 시간에는 한국 어업법의 도입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업법과 어업권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제정된 「어업법」은 본문 14개 조, 부칙 2개 조로 어업과 어업권에 대한 정의 1조가 있고, 어업권은 다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2조, 9조, 10조 세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부분은 어업권 존속 기간, 어업권 제한, 분쟁조치,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어업법」과 「어업령」에 의한 어업과 어업권에 대해 법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원래 법구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업법」 제1조에서 정의한 어업과 어업권입니다. 다음으로 「어업령」 제1조에서 정의한 어업과 어업권입니다.

### 어업법

第一條 本法에 漁業이라稱함은 營利의 目的으로 水産動植物을 採捕 又は 養殖을 하는 業을 謂함 이오 漁業權이라稱함은 第二條를 依하여 免許를 受한 漁業을 做한 權利를 謂함

제1조. 본법에 어업이라 칭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을 하는 업을 말하며, 어업권이라 칭함은 제1조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 어업령

제1조 이 영에서 어업이라 함은 공공용수면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거나 양식하는 업을 말하고, 어업권이라 함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영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하는자 및 어업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어업법」과 「어업령」에서 정의되는 어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업권은 「어업법」에서는 우선적으로 동법 제2조에 정의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 「어업령」에서는 조선총독으로부터 허가를 부여받은 어획 권리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다시 말해 「어업법」은 면허어업만 권리 부여 대상으로 간주한 반면, 「어업령」에서는 어업권의 포괄 범위가 면허, 허가, 신고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업법」은 구래부터 사적소유가 성립된 어업이 주로 면허어업인 점이 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업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국 수산업의 발전사 강의에서의 「어업권 제도」는 「어업령」의 세 가지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 강의의 주요 키워드인 소유권 체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본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면허어업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어업법」으로 돌아가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어업은 연안어장의 배타적 점유관계를 구분는 것, 허가어업은 근해어업의 이용에 대한 진입 제한 및 허용을 규정하는 것, 신고어업은 자연자원의 총량 훼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생계형 어업에 한하여 어장의 자유로운 이용과 관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법적 의미로 면허는 허가를 포괄하고 있으나, 어업권에 대해서 이를 구분하고 있어 구분하여 설명드리자면, 면허어업권은 어장에 대한 설권행위의 배타적 보장, 허가어업권은 국유어장에 대한 허가 이용으로 구분하여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업법」에서 면허어업은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 어업법

第二條 左開 種類의 漁業은 農商工部大臣의 免許를 受치 아니하면 做業함을 不得함

- 一. 一定 水面에 漁具를 建設 又는 敷設하고 一定 漁期間을 定置하여 做하는 漁業 (第1種免許漁業)
- 二. 一定 區域內에서 捕貝採藻 又는 養殖을 하는 漁業 (第二種免許漁業)
- 三. 陸地 又는 巖礁等에 地點을 一定하여 漁網을 曳揚 又는 曳寄하는 場所로 하고 一定 漁期間에 頻數 使用하는 漁業(第三種免許漁業)
- 四. 一定 水面을 漁網의 建設 又는 敷設하는 場所로 하고 一定 漁期間에 頻數 使用하는 漁業(第四種免許漁業)







前項外에 一定한 水面에 對하여 資本과 勞力を 費하고 魚類를 集合케 하는 漁法으로서 經營하는 漁業(第五種免許漁業)에 關하여는 漁業者의 請願을 依하여 農상공부대신은 漁業免許를 與하고 此를 保護함을 得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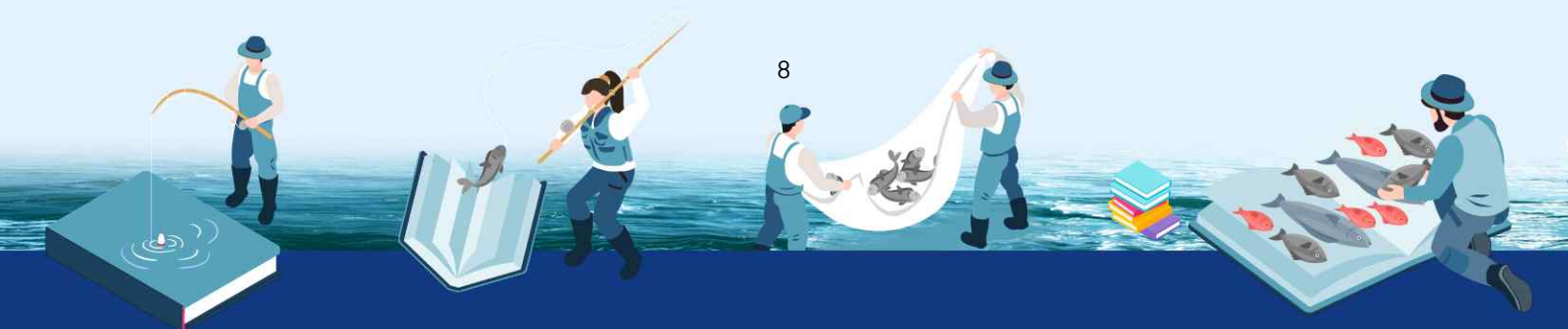
제1조 좌측으로 나열한 종류의 어업은 농상공부대신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면 어업을 행할 수 없음  
 일. 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건설 또는 부설하고 일정한 어기간을 정치하는 어업(제1종 면허어업)  
 이. 일정한 구역내에서 포패채조 또는 양식을 하는 어업 (제2종 면허어업)  
 삼. 육지 또는 암초 등에 지점을 정하여 어망을 예양 또는 예기하는 장소로 하고 일정한 어기간에 반복하여 사용하는 어업 (제3종면허어업)  
 사. 일정한 수면을 어망의 건설 또는 부설하는 장소로 하고 일정한 어기간에 반복하여 사용하는 어업 (제4종면허어업)  
 앞의 외에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지불하고 어류를 집합케 하는 어법으로서 경영하는 어업(제5종면허어업)에 관해서는 어업자의 청원을 의하여 농상공부대신은 어업면허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함을 득함

위와 같은 면허어업의 다섯개 부분은 공유자원에 대한 배타성 보장 정도에 의해 구분되는데, 제1종 면허어업이 가장 배타적이며, 제3~5종 면허어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배타성이 요구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1종 면허어업은 어구를 이용하여 수면을 항시적으로 점유하여 어획을 하는 어전 등 정치성어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2종 면허어업은 기존에 광전, 태전으로 일컬어진 것과 마을 앞 채조 및 포패지(捕貝地)를 면허한 것으로 미역, 김, 굴 등 해조류와 조개류를 양식 또는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외 제3종 면허어업~제5종 면허어업은 육계의 자연 지형 또는 수계의 암초 등을 기반으로 관행적으로 가시적 어장이 구획된 경우, 일정 수면에 어망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일정한 수면에 자본을 투입하여 어류를 집합하는 어법 등으로 특정 수계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어업들을 말합니다. 비교적 1종 면허어업보다는 먼바다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동일한 어장에 있어서는 동일한 어기, 동일한 어류의 어업을 면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면허어업의 배타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업법」에서 허가어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법

第九條 左開의 種類의 漁業은 農商工部大臣의 許可를 受치 아니하면 做業함을 不得함

- 一. 陸地 又는 巖礁等에 地點을 一定하야 漁網을 曳揚 又는 曳寄하는 漁業으로 第二條 第一項 第三號의 漁業에 屬하지 아니한 者
- 二. 風力 汽力 又는 潮流를 依하야 囊網을 水中에 引曳하는 漁業
- 三. 人力을 依하거는 又는 機力을 應用하고 漁網으로써 魚類를 圍繞하야 漁船에 繰揚하는 漁業
- 四. 潛水器械를 使用하는 漁業
- 五. 第二條 第二項의 漁業으로 免許를 受치 아니한 者

제구조 좌측으로 나열한 종류의 어업은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어업을 행할 수 없음

- 일. 육지 또는 암초 등에 지점을 정하여 어망을 예망 또는 예기하는 어업으로 제이조 제일항 제삼호의 어업에 속하지 아니한 자
- 이. 풍력 기력 또는 조류를 이용하여 낭망을 수중에 인예하는 어업
- 삼. 인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력을 응용하고 어망으로써 어류를 둘러싸서 어선에 조양하는 어업
- 사. 잠수기계를 사용하는 어업
- 오. 제이조 제이항의 어업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허가어업은 면허어업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부 어업, 풍력·기력·조류를 이용하는 낭망어업, 근대어업기술 도입 등 특정하게 구획되지 않은 근해어장에서 자본이 투자된 어망어업과 잠수기어업 등입니다. 즉 허가어업은 발달된 어업 기술을 이용하여 무주물을 선점함에 있어, 기존에 자유점근체제였던 것을 국가가 허가권으로 그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어업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 어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부윤에 신고를 통해 어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자유점근이 가능한 마을 앞 지근 어장에서 행해지는 맨손어업, 투망어업 등 자원 훼손이 적고 어획노력량이 낮은 생계형 어업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1908년 「어업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면허, 허가, 신고의 세 가지 어업권 제도는 1911년 「어업령」, 1925년 「조선어업령」으로 이어져 해방 이후 「수산업법」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업법과 어업권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업령의 시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4-3 어업령의 시행과 면허어업의 종류

지난 시간에는 어업법과 어업권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업령의 시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합방 이후 1911년 「어업령」이 제정되면서 「어업법」은 폐지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 제국기에 제정된 「어업법」은 이후 어업의 기본법이자 어정의 모법이었습니다.

1911년 「어업령」은 큰 틀에서 「어업법」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당시의 어업기술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개정된 것이 큰 골자였습니다.

구체적인 면허어업의 분류는 「어업령시행규칙」 제17조와 제26조에 의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면허어업을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6종으로 한다.

1. 제1종 면허어업 일정 수면에 어구를 건설하거나 부설하여 일정한 어업기간 동안 정치(定置)하는 어업
2. 제2종 면허어업 일정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養殖)을 하는 어업
3. 제3종 면허어업 해변의 일정 장소에서 일정 어업기간 반복하여 어망을 예양(曳揚)하거나 예기(曳壽)하여 행하는 어업
4. 제4종 면허어업 일정 수면에서 일정 어업기간 반복하여 어망을 건설(建設) 또는 부설(敷設)하여 행하는 어업
5. 제5종 면허어업 일정 수면에 어류를 집합(集合)케 하는 시설(施設)을 경영(經營)하는 어업
6. 제6종 면허어업 전 각호에 계기한 것을 제외하고 수면을 전용하여 행하는 어업  
전항의 종류에 해당하는 어업의 명칭은 조선총독이 고시한다.

다음은 제26조 허가어업 분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허가어업은 9종입니다. 다음은 신고어업입니다.

제33조 신고어업을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3종으로 한다.

1. 제1종 신고어업 하나의 어선에 3인 이상 승선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2. 제2종 신고어업 하나의 어선에 3인 이상 승선하고 연승 기타 낚시도구를 사용하는 어업
3. 제3종 신고어업 전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업

면허어업은 제1종과 제3종, 제4종, 제5종은 어업령과 동일하고, 제2종은 제2종과 6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908년 「어업법」과 1911년 「어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허어업으로서 제6종 면허어업을 추가로 개설한 점, 그리고 후술하는 어업조합 설립을 규정한 것입니다.

허가어업의 경우, 기존에 5개 부문을 9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선진기술의 도입에 따라 어업규제가 필요한 부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어업은 기술적, 규모면에서 면허어업보다는 발달한 대규모 어업으로, 일부 남획이 우려되는 어업은 총독부가 자체적으로 어장구역과 정한을 제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업법」에서 어업권이 면허어업을 대상으로 정의되었듯이 「어업령」에서도 전통적으로 소유관계가 발달하였던 어업은 대부분 면허어업으로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지선에서 어업을 행하는 어업자들의 어업권을 범위로 하는 면허어업을 중심으로 주제의 범위를 좁혀서 논하고자 합니다.

면허어업 부문 「어업법」에서 「어업령」의 이행상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으로 종래의 제2종 면허어업이 '포패채조 또는 양식을 하는 어업'에서 '양식을 하는 어업'으로 변경되었고, 제6종 면허어업이 '수면을 전용하여 행하는 어업'으로 신설된 것이 매우 중요한 변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면허별 어업 명칭을 통해 확인되는데, 1911년 8월 5일자『관보』제281호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보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면허별 어업 종류는 이후 신규 어구어업의 개발 등에 따라 추가되기 때문에 고시상의 리스트의 변동이 있으나, 최초로 고시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어구어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종 면허어업은 일정 수면에 어구를 건설하거나 부설하여 일정한 어업기간 동안 정치(定置)하는 어업입니다. 제1종 면허어업은 총 23개로 대부망(大敷網)어업, 소부망(小敷網)어업, 대대망(大臺網)어업, 소대망(小臺網)어업, 줄시(釣矢)어업, 장시(杖矢)어업, 각망(角網)어업, 거망(擧網)어업, 낙망(落網)어업, 결낭망(楸囊網)어업, 장망(張網)어업, 주목망(柱木網)어업, 설망(設網)어업, 왕망(旺網)어업, 말장목사(抹杖木絲)어업, 우레(羽瀨)어업, 방렴(防簾)어업, 어전(漁箭)어업, 입(吹)어업, 어언(圍堰)어업, 차림(遮簾)어업, 차망(遮網)어업, 량(梁)어업 등입니다. 참고로 1909~1921년간 신규로 발급된 제1종 면허어업의 비중은 약 60.4%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고 또 전문적인 어구어법 용어이므로 제1종 면허어업의 대표적 예로서 어전어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구어법에 대한 자료는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한 '우리나라의 어구와 어법'을 활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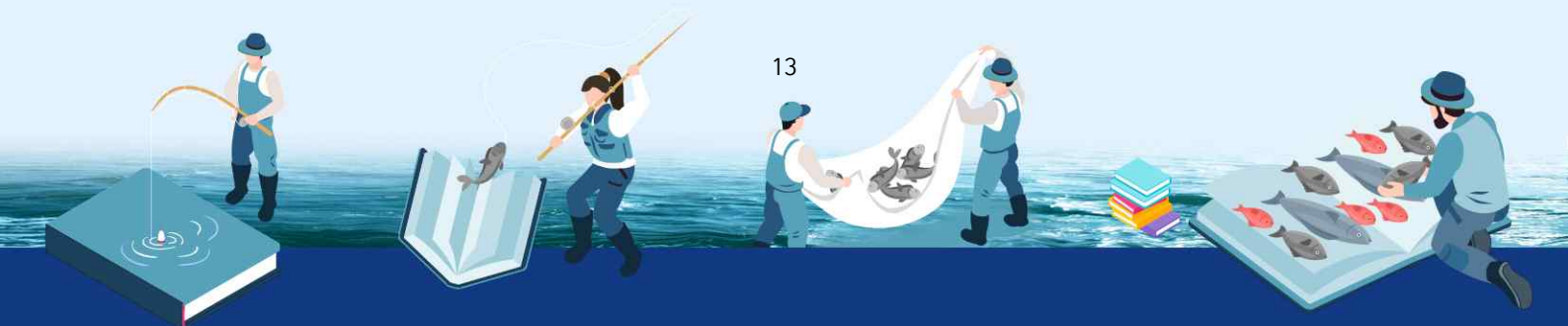
제1종 면허어업 중 대표적인 어전어업은 조선 시대에서도 쓰였던 전통적인 어구어법입니다. 어전어업은 어살을 어획의 주재료로 하는데,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간조 시 바닥이 드러나거나 수심이 아주 얇아지는 곳에 고정목을 박고, 대나무를 엮어 만든 발이나 그물을 쳐놓고 어획하는 것으로 어살류라고 합니다.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대상생물은 미로로 된 함정에 빠져 썰물 때 나가지 못하고 잡힙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대나무 발로 미로를 만들어 대상생물을 잡는 죽방렴을 많이 부설하였습니다. 제1종 면허어업의 잘 알려진 사례로 죽방렴(竹防簾, Bamboo weir)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죽방렴은 대나무 등으로 발을 엮어 울타리(fence)를 만들어서, 고기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가기 어렵게 퇴로를 차단하여 어획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용한 오래된 방법으로, 어구의 일부분에 그물류의 망지를 사용하거나 일부를 변형시켜 고기를 한 곳에 모이도록 한 것 등 지방에 따라 날개 그물의 규모나 원통의 모양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구는 주로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세고 수심이 얇은 해역의 개펄에 설치합니다. 일단 바다 밑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항목을 박아 V자 모양으로 벌어지게 날개그물을 설치하고, V자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루그물을 부설합니다.

입구는 대개 밀물을 따라 고기가 들어가도록 조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치해 놓고, 물이 빠지면 자루그물에 갇힌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자루 부분에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대나무로 발을 엮어 사용했기 때문에 죽방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2회 간조 때 자루그물에 모인 고기를 쪽대그물로 어획하는데, 간조 시에도 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구는 목재의 수명에 따라 약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며, 어구를 정리하기 위해 월 25일 정도 조업을 합니다. 보통 3월~12월, 서·남해안 간석지에서 죽방렴 어업이 이루어지는데, 어획물은 평균적으로 멸치 약 80%, 기타 약 20%입니다. 죽방렴에서 획득된 멸치의 경우 통상 죽방멸치라 칭해지기도 합니다.

제2종 면허어업은 4개로 분류되며, 어류양식업(魚類養殖業), 개류양식업(介類養殖業), 조류양식업(藻類養殖業), 잡종양식업(雜種養殖業) 등입니다. 참고로 1909~1921년간 신규로 발급된 제2종 면허어업의 비중은 약 3.3%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종 면허어업의 대표적 모습은 김양식, 가두리 어류 양식입니다. 즉 구획이 가능한 곳에 양식어장을 설치하고, 양육합니다. 토지와 같이 구획된 장소를 활용하며 대상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김 양식에 대해서는 복잡한 어구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종 면허어업은 지예망(地曳網)어업, 휘리망(揮羅網)어업, 선예망(船曳網)어업, 조(도미)지조망(鯛地漕網)어업, 뢰예망(瀨曳網)어업, 조예망(藻曳網)어업 등 6종류입니다. 제4종 면허어업은 부망(敷網)어업, 대망(待網)어업, 방진망(防陳網)어업, 곡건망(曲建網)어업, 정선망(碇船網)어업, 방어망(魴魚網)어업, 건간망(建干網)어업, 괘망(掛網) 어업 등 8개 종류입니다. 참고로 1909~1921년간 신규로 발급된 제3종 면허어업의 비중은 약 18.9%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4종 면허어업은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종 면허어업은 해변의 일정 장소에서 일정 어업기간 반복하여 어망을 끄는 행위 즉 예양(曳揚)하거나 예기(曳寄)하여 행하는 어업입니다. 예는(曳) 끌다, 끌어당기다는 의미이며, 양은(揚) 위로 올리는 것으로, 제3종 면허어업은 대체로 어군을 후리그물로 둘러싼 뒤 그 그물을 끌어 당겨 어획물을 포위하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멸치, 고등어, 정어리 등 무리를 지어 다니는 특성이 있는 물고기 떼를 둘러싸 육지 쪽으로 그 물을 잡아 올려 잡는 어망을 이용한 어구어법입니다. 현재는 멸치 권현망과 선인망이 가장 유사합니다. 어구어법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종 면허어업은 일정 수면에서 일정 어업기간 반복하여 어망을 건설(建設) 또는 부설(敷設)하여 행하는 어업이며, 대표적 모습은 괘망어업입니다. 괘망어업은 주로 조기잡이어업에 사용되는 데 바다가 육지로 깊이 들어온 곳에 설치하는 그물로 알려졌습니다. 회유하는 조기어군의 경로를 따라 어망을 설치하여 어획하는 어구어법입니다. 현재는 안강망과 지인망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5종 면허어업은 사부(飼付)어업, 서지(鰐漬 즉 만새기)어업, 축기(築磯)어업 등 3종류입니다. 제5종 면허어업은 인공부어초(人工浮魚礁)를 바다에 건설하고, 여기에 모여든 가다랑어, 만새기(시이라), 참치, 삼치 등 회유성 어류를 채낚기, 끌낚 등으로 잡는 어업을 말합니다. 실제 식민지기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었던 면허어업입니다. 1913~1921년간 실제 발급된 어업권은 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종 면허어업은 포개전용(捕介專用)어업, 채조(採藻)전용어업, 망어(網漁)전용어업 등 3종류입니다. 다시 말해 제2종 면허어업에서 삭제된 '포파채조'가 제6종 면허어업의 포개전용어업, 채조전용어업으로 분류된 것임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09~1921년간 신규로 발급된 제6종 면허어업의 비중은 약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업령의 시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용어업권의 도입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4-4 전용어업권의 도입과 의의

지난 시간에는 어업령의 시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용어업권의 도입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규정한 제6종 면허어업과 관련된 법조항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가장 큰 차이는 첫째, 1911년 「어업령」의 제6종 면허어업은 「어업법」하 제2종 면허어업에 속했던 채조(採藻), 포패(捕貝)를 따로 분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구한말(舊韓末) 한국수산지의 기록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채조는 사점, 총유되기도 하였으나, 포패는 주로 마을 주민에 의해 전용되는 마을 앞 어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제6종 면허어업의 주요한 특징으로 어업권을 개인이 아닌 어업공동체에만 부여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이전법과의 차별점이었습니다. 즉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개인의 선점이 아닌 공동체만이 공유자원을 점유, 관리케 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였습니다. 특히 제6종 면허어업의 어업공동체는 어촌의 경영 또는 유지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전용어업 도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어업은 원래 일본의 「구어업법」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기서 「구어업법」은 1901년 명치 34년 일본에서 제정된 최초의 「어업법」을 칭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문 35조로 구성된 동법은 일본에 어업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근거법이었습니다. 이후 「구어업법」은 1910년 전문 65조의 「명치어업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시 전용어업으로 돌아가면, 전용어업은 일본의 전통적인 어업, 다시 말해 봉건영주제 하에서 접지어장이 마을 총유적 개념에 입각하여 배타적 관리, 유지되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구관이나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되어오던 어장이용관계가 「명치어업법」을 통해 전용어업권으로 법제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기존에 봉건 영주를 중심으로, 실질적 지배력에 의해 유지되어오던 전근대적 어장이용관계에 근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개입한 것으로, 우선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공동체에 그 권리를 부여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의미하며, 이를 근대적 형태로 변모시킨 것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대한제국기 「어업법」과 식민지기 조선의 「어업령」은 둘 다 일본의 「구어업법」과 「명치어업법」을 모태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용어업의 도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업령」과 「어업법」을 구분하는 주요 특징인 제6종 면허어업, 즉 전용어업 도입에 관해 기존 연구의 역사적 평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업법」에서 전용어업에 대한 규정을 누락하고 바로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식민지 수탈구조의 조기 완성을 지향한 것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의 골자는 「어업법」에는 전용어업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선의 연안 어민에게 공유되어야 할 주요 어장을 이 시기 조선으로 진출한 일본 어민들에게 내주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근대적 어업제도를 도입하면서 어업 소유관행의 핵심인 지선어촌과 지선어장의 마을 총유를 「어업법」이라는 새로운 법제도에 편입시키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구래의 연안어업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어업공동체가 조선에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어업공동체의 존재가 매우 핵심적 가치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시각으로 전용어업제도는 일본인 이주어업자들의 정착을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인 조합설립의 형식을 조선에 도입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조합의 도입에는 조합이 사실상 국가가 어업제도를 관리하는 실질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행정적인 면도 고려되었다고 그 의의를 설명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용어업제도와 조합설립규정은 근대적 어업권 제도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장에 대해 전통적인 사적 소유권 제도와 조세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무주물 선점, 즉 기존 자유접근체제의 관행에서, 어업권 제도의 도입으로 공동체 기반의 근대적 소유제도로 이행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전용어업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의 논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한제국의 「어업법」적용시기 전용어업제도의 유보로 일본인에게 어업권이 침탈되었다는 점은 수궁하기 어려운 면이 다소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의 어업생산력의 증대와 그 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은 이미 총독부의 통계상으로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업령」에 의한 제6종 면허어업 도입 그리고 어업조합에 대한 어업권 부여가 실제 이와 같은 식민지기 어업 침탈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6종 면허어업은 1909년~1921년간 924건이 면허되었는데, 이는 전체 면허어업의 10.3% 수준에 불과하였고, 어업자는 대부분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지역 기반의 어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주요한 반증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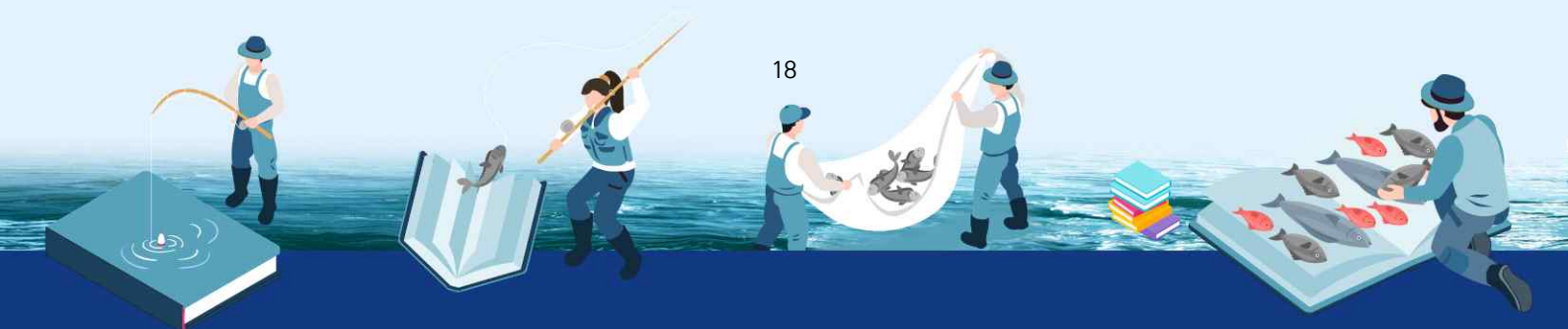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조선에서의 지선어장 이용은, 크게 정착성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조·포패업, 이동성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성 어구와 이동성 어구를 활용한 어업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용어업제도 대상이 되는 채조, 포패의 어장의 경우, 섬 주변 어장을 토지에 부속하여 소유하는 형태로 구래부터 양반의 실질적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사점의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렇듯 전용어업대상 어장에도 이미 다양한 소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성어구는 입안을 통해 어장의 사적소유권을 보장해 주었지만, 이동성 어구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수산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먼바다에 대한 자유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즉 본래 조선에서는 관행상 지선어장이라는 법적 개념은 소유권과 자원관리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어업령」을 통한 전용어업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식민지기 일본인에 의한 조선의 전통어업 침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실체적 내용, 즉 전용어업에서 규정한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는 일본과 조선의 전용어업관련 규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어업령」에서의 제6종 면허어업의 범주는 채조, 포패, 망어전용어업으로, 그 범위가 일본에 비하면 매우 협소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최초 근대적 어업법인 「구어업법(舊漁業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1901년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전문 35조로 구성된 「구어업법」은 전체의 수면을 공유수면으로 간주하고 일본에 어업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면허어업은 정치어업권, 구획어업권, 특별어업권, 전용어업권 등 4종류로 구분하는 한편, 근해 또는 대양 어업은 자유어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마을 앞바다인 지선어장은 면허어업에 포함시키고, 어장총유제에 입각하여 어장이용어업자의 연대책임제로 하였으며, 먼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조업(沖漁)은 입회관행으로 그 원칙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일본의 「구어업법」에서 지선어장의 이용을 의미하는 면허어업 가운데 전용어업의 범위는 정치, 구획, 특별어업권 어업 이외의 수면을 전용하여 행하는 어업으로서, 접지 및 인접수역에서 미역과 같은 정착성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었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구어업법」을 통해 지선어장의 정착성 수산동물을 전용어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직접적인 이용자들에게 면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유자원의 총유를 최초로 법률로 제도화하였습니다.

이후 1910년 「구어업법」을 개정한 「명치어업법」은 전용어업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지선전용어업을 공동어업으로 개칭하고 제1~5종 공동어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안해역의 망구, 낚시 등 지선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어선어업까지 포함하였으며, 공동어업권의 소유 주체는 어업조합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명치어업법」하 어업권 제도에서 포괄하는 전용어업 즉 공동어업의 범위는 마을 앞 지선어장으로 이전보다 광범위하였고, 소유 주체인 어업조합은 지선에서 행해지는 어장을 총유하며 전적으로 어장을 이용, 관리하는 주체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어업령」에서의 전용어업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전용어업은 「어업령시행규칙」제17조에 '전 각호에 계기한 것을 제외하고 수면을 전용하여 행하는 어업'으로 정의되었으며, 채조전용어업, 채패전용어업, 망어전용어업 3종류로 세분되고 있습니다.

이는 1901년 제정된 일본의 「구어업법」의 전용어업에 망어(網漁)전용어업이 새로 포함된 형태였습니다. 즉 일본의 「구어업법」보다는 확대되었으나, 「명치어업법」보다는 협소한 범위로 어업공동체의 관할 범위는 「명치어업법」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민지 조선의 전용어업제도 도입은 앞서 시행된『한국수산지』로 대표되는 전국적 어업실태 사전 조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수산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한말(舊韓末) 대부분 어촌 마을 앞 지선어장에서 행해졌던 채조와 채패는 공동어업으로 영위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공동어업 활동은 미역발인 채조장에 특정 소유주체가 있더라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괘전(藪田)으로 지칭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아 토지와 유사하게 개인이 사유하였던 특성의 채조장일 경우, 그 이용자의 범위가 인근까지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한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둘째, 어전으로 대표되는 정치성 어업에 대해서는 사적소유가 실질적으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지선어장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기득권자의 반발을 가져오는 위험성이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안 지역의 조선 어민들이 일본의 「명치어업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을 앞바다를 독점적으로 총유하게 될 경우, 사실상 최근에 이주한 일본인 이주어업자의 조업권과 상충하는 것도 주요한 고려 사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공유자원을 공동으로 수획하는 어업의 경우, 일본이 「구어업법」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전용어업제도를 이식하되, 그 범위는『한국수산지』등을 통한 전국적인 어업실태조사 결과와 당시 일본인 어업자의 조선으로의 이주 방침을 고려하여 일부 어업에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본과의 차이점은 일본의 「명치어업법」보다 전용어업의 범위를 축소해서 적용하되, 「구어업법」의 전용어업 대상인‘채조, 포패’에 「명치어업법」의 일부인‘망어전용’을 추가로 확대하여 이동성 수산자원까지 전용어업의 대상으로서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민지기 조선에서 공유자원에 대한 법제도화는 해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림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1911년 「삼림령」을 공포하고 시행하였는데, 어업에서의 제6종 면허어업 전용어업과 유사한 부문의‘입회관행’을 명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입회관행’은 근세 일본에서 발달한 총유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삼림령」을 통해 본격적으로 창출된 제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산림은 전통적인 무주공산 즉, 자유접근관행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총독부는 일본에서 시행되던 '입회관행'을 규범으로서 도입하였습니다. 즉 식민지기 총독부는 산림, 어장 등 주요 공유자원에 대해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되, 그 방식은 기존의 일본에서 실시한 제도 이식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유자원의 관리 주체는 어업과 동일하게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행범위는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본의 제도를 완전하게 이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업에서는 식민지기 조선 전용어업 대상과 범위가 일본의 「명치어업법」에 비해 협소한 수준이었던 점, 그리고 「삼림령」에 의한 입회관행 창출에 대해서는 일본은 민유림에서도 성립한 반면, 식민지 조선의 경우 국유삼림으로 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를 대변합니다.

다음으로 제6종 면허어업의 어업권 주체인 어업조합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령에서 제6종 면허어업에 의한 총유어장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우선적 어업권이 있었던 어업조합의 역할도 법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나, 반대로 어업조합의 역할은 이보다 광의(廣義)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어업령」과 함께 발표된 「어업조합규칙」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 성립된다. 조합이 성립되면 그 지구내 거주하는 어업자는 그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구내 어업자의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명치어업법」의 어업조합과 동일한 역할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제6종 면허어업의 전용어업에 대한 어업소유권자로서의 어업조합과 지역의 어업을 관리하는 일종의 통치행정의 주체로서의 어업조합을 혼동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어업권 제도와 수탈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어업조합은 조선에 정착한 일본인 이주어업자의 지원을 위한 창구로서,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어업조합은 국가의 위임하에 식민지기 어업제도를 관리하는 실질적 행정적 주체의 역할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1929년에 도입된 지정조합제도가 이를 잘 대변합니다. 지정어업조합은 조합의 건실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조합으로서, 지정조합은 도지사가 이사를 임면하고 그 급료를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업령」에서 최초 도입한 제6종 면허어업과 어업조합규정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어업수탈론적 시각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6종 면허어업의 설정 자체는 어장의 총유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어업소유권 제도의 형성이라는 본질적인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제6종 면허어업은 개인에게 어업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제1~5종 면허어업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어촌의 경영 또는 유지에 관한 계획서'를 면허 신청시 의무적으로 첨부서류로 제출케 하였다는 점은 재평가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용어업권의 도입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업법에서 어업권 제도와 이후 어업령에서 전용어업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공동체 어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맹골도 어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4-5 어업법의 적용과 어민의 삶 : 전용어업권과 공동체 어업(맹골도 사례)

지난 시간에는 전용어업권의 도입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업법의 적용과 어민의 삶을 주제로 전용어업권의 도입에 따른 공동체 어업의 변화 양상을 맹골도(孟骨島) 어민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어업령」의 주요 특징 가운데, 제6종 면허어업의 도입으로 공동체의 소유권이 창출되어, 이후 전통적 사점주체와 식민지기 총유주체 간의 어업권 다툼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와 공동체 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앞서 진행된 강의의 핵심을 다시 요약하면, 전용어업은 기존의 1908년 「어업법」에서는 제2종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이전에는 개인에게 권리 부여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업령」을 통해 전용어업권이 창설되면서 마을 앞 접지어장의 채조, 포패는 법적으로 어업조합 또는 어업공동체에만 그 권리가 부여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맹골도를 둘러싼 어업권의 소유관계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골도의 어업권과 관련하여 이용된 사료는『고문서집성 II-해남윤씨가』에 수록된 해남윤씨가(海南尹氏家)의 고문서입니다. 동 자료는 해남윤씨가가 보존해 온 것으로, 한말(韓末)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해남윤씨가의 맹골도를 둘러싼 소유권 행사와 현 주민의 수세저항 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를 취합한 것입니다. 동 문서를 활용한 연구자는 대표적으로 안승준, 이종길, 정운섭, 김현영 등이 있습니다.

맹골도는 전라남도 진도의 남서쪽으로 53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섬입니다. 맹골도는 재지사족이었던 해남윤씨가(海南尹氏家)가 일찍이 사점하여 수취의 대상이 되었던 섬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맹골도가 해남윤씨가의 소유라는 점이 기존에 문서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부문도 존재하였지만, 1687년 3월에 올린 정묘년 삼월에 작성된 소지(所志)로부터 맹골도가 윤효정 대(代)부터 자신들의 소유로 되어왔다는 주장이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선대부터 해남윤씨가가 관리해 온 섬으로 그 소유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맹골도민은 해남윤씨가에 임대 소작료인 도세(賭稅)를 매년 납부하는 관계를 약 400여 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즉 해남윤씨가는 오랜 기간 동안 맹골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와 지배력을 행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1908년 「어업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이러한 지배관계에 변화가 요구되게 됩니다.

일단 맹골도 연안 어장의 배타적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권 취득이 필요하였습니다. 즉 「어업법」 이전에는 섬 주변 연안 어장에 대한 권리는 토지에 부속된 것으로, 어업과 관련된 소유권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근대적 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어업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에 윤정현은 1911년 11월 6일자로 맹골도의 연안 어장에 대해 제2종 채조면허 면허어업 제1344호를 개인소유면허로 출원, 취득하게 됩니다.

해남윤씨가가 맹골도 주변 연해를 대상으로 제2종 채조면허 이외 타 어업권 취득하였는지 여부는『고문서 집성 II-해남윤씨가』사료로부터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동 자료가 어업권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수집되었다는 목적과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강의에서 여러차례 언급하였듯이 제2종 면허어업 중 채조면허는 1908년 「어업법」에서 1911년 「어업령」으로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전용어업제도」에 따라 제6종 면허어업으로 변경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해남윤씨가가 제6종 면허어업 이외 타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해남윤씨가 개인이 취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없었고, 자료 수집도 불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은 제6종 면허어업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1908년 「어업법」하에서는 섬을 둘러싼 채조어장 어업권에 대하여 과거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해남윤씨가(海南尹氏家) 개인이 법적 어업권자로서 등록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뒤인 1916년 12월 21일자로 어업권의 면허 기간이 만료되었고, 당시 개정된 「어업령」하에서는 채조면허는 총유만이 가능하여 개인소유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윤정현은 제2종 채조면허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어업권 존속기간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기에 이릅니다. 아울러 동 어업권의 제6종 면허를 개인면허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남윤씨가(海南尹氏家)의 윤정현은 제6종 면허어업 취득을 위해, 400년 유래의 해남윤씨가의 망골도 소유관계 증빙서류와 더불어 '윤씨가(尹氏家)의 도움으로 잘살고 있고, 저희들을 오히려 잘 보살펴 줌으로써 윤씨가가 면허를 득하여 그 아래 고부(雇夫)로 살게 됨이 저희에게는 오히려 행복'이라는 내용의 망골도 주민 청원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올렸으나, 제6종 면허어업권의 취득은 개인에게 부여할 수 없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근대적 법제도가 도입되고 있었던 20세기 초, 사실상 어장을 지배하였던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어업권에 대한 법의식의 단편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면허어업권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근대법과 이에 근거한 제도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도 부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업령」하 전용어업의 대상 어장은 400년 이상 고래부터 유지되어온 실질적인 어업소유권자의 소유 지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으로 사실상 개인적인 소유가 부정되고 공동체의 총유만이 인정되었던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해남윤씨가(海南尹氏家)의 윤정현은 새로운 면허어업의 출원 형식을 갖추어, 주민 42명의 연명 날인 아래 출원 대표자로서 이응선과 윤주형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제6종 면허어업 제6973호를 획득하는 등 차선적 지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보시는 자료는 해남윤씨 소유 망골도 면허어업권에 대한 『관보』 게재 사항입니다. 윤정현이 소유한 제2종 면허어업 제1344호는 1916년 11월 5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다시 1918년 5월 20일자로 제6종 면허어업으로 면허되었습니다. 이때 어업권자는 윤정현 개인이 아닌 총유, 즉 망골도리 채조업자로 지역어업자였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전용어업권의 소유는 총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처럼 「어업령」에 의해 전통적 실소유주와 섬 주민이 병기되어 그 소유가 공동어업자로 설정되었지만, 관행적으로 유지되었던 소유관계가 즉시 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치 45년에 작성된 맹골도와 부속 도서인 죽도, 광도의 사용 수익권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면, 광(薑) 26첩 4속 대금 254엔, 모(牟) 17석 15두, 가사리(加士里) 1,100두 대금 44엔, 건어(乾魚) 13속 4개, 전복(全鰓) 250개, 두팔리해(斗八里醢)(뒤파리젓) 4동이, 김의 일종인 모해의(毛海衣) 200토(吐) 해의(海衣) 30토(吐), 어유(魚油) 5두 등의 납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촌에서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었던 관행적 소유관계는 약하게나마 식민지기인 1930년대까지 존속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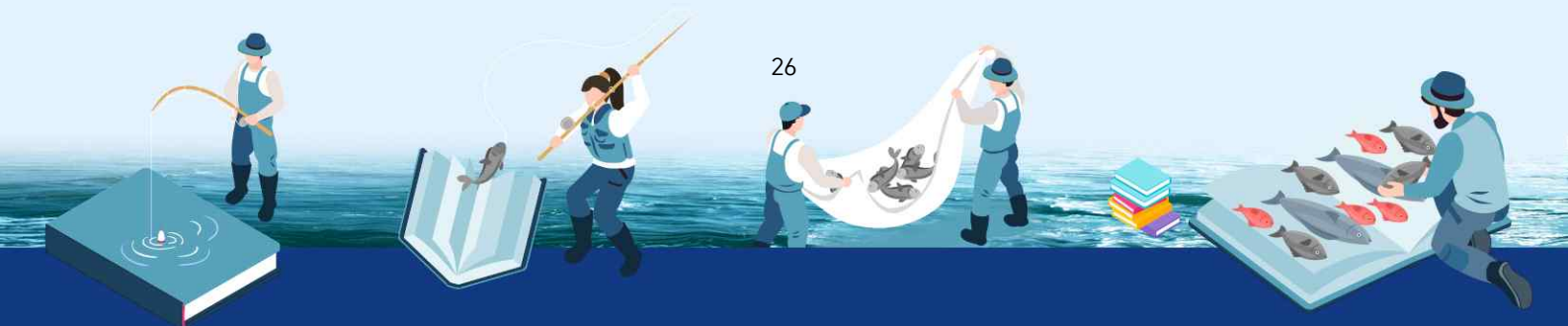
이 자료는 1935년 10월 16일자 동아일보에 수록된 맹골도민의 생활고에 대한 지방 논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맹골도민의 과도한 소작료 납부 부담의 고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곳의 주민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모씨(某氏)의 소작인으로서, 소작료 징수 방법은 답(沓)은 추수기에 현품을 반분하고, 전대지료(田垞地料)도 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두어 가는 것이 대맥(大麥) 17석 7두 5승, 감곽(甘藷) 55속, 태곽(馱藷) 7속, 사어(沙魚) 14속, 손방어 300미, 어유(魚油) 5두, 석해의(石海衣) 30툇, 뒤파리젓 4동해(東海)로 총 가격은 483원 70전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맹골도민의 소작료에는 여전히 해산물에 대한 납부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35년까지도 관행적인 소유관계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관행적인 소유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었지만 어업권의 소유추체는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업령」에 의하여 법제도적으로 42명의 도민들은 공동어업권자가 되었고, 실질적인 지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남윤씨가는 입회인 가운데 한사람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맹골도의 사례는 전통적으로 실력을 기반으로 한 지배로, 섬 등과 같이 어장을 토지에 부속하여 소유하여 온 어장 소유권이 근대적 어업권 제도 도입에 의해 형식적으로나마 개인소유에서 총유로 변형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기간 유사한 형태로 만료된 제2종 채조전용 면허어업은 제1328~1345호에 이르는 33건으로 이들은 맹골도와 동일한 성격의 어업권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이 이후에 제6종 면허어업으로 발급되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맹골도와 유사한 이행을 보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업령」의 제6종 면허어업 전용어업제도는 공동체로 어업 권리를 이양하는 제도적 총유 도입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근대적 어업소유제도가 도입되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어업공동체'만 어장을 전용케 하는 '제6종 면허어업', 즉 전용어업제도(專用漁業制度)의 도입이 실제 어장 소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식민지기 근대적 산림소유제도의 성립으로 '임회관행'이 창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업에서는 「어업령」하 '전용어업제도'를 통해 어업을 실제 행하는 공동체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식민지기에 도입된 어업권 제도는 일본의 어업법을 모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구한말(舊韓末) 도입된 「어업법」은 어업과 관련된 최초의 어업기본법으로 면허, 허가, 신고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법은 식민지기로 이행되면서 시행 3년만인 1911년 「어업령」으로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 사항인 제 6종 면허어업과 어업조합 설립에 대한 규정은 조선 내에서 공동체를 어업권자로 강제 규정하는, 즉 전용어장에 대한 총유를 법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업뿐만 아니라 산림 등 식민지기 공유자원에 대한 일련의 소유권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업령」에서 규정한 전용어장의 범위는 채조, 채패, 망어 전용으로 어장의 일부로 한정되었으며, 마을 앞 지선어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어업을 어촌공동체가 총유케하는 일본의 제도보다는 축소된 범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치성 어구에 대한 사적소유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성 어구에 대해서 사적소유가 발달하였던 조선의 전통적 어업 상황과 일본에서 시행된 조선으로의 일본인 어업자 이주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후자는 어업권 제도가 어업 수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에 묻혀 전용어업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강의에서는 식민지기 전용어업제도의 도입을 단순히 식민지기 수탈의 도구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총유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어업소유권 제도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윤씨의 망골도 지배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재해석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어장을 토지에 부속된 산물로 보았던 시각이, 「어업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어장이 토지와 분리된 소유권 대상으로 전환되어 인식되었다는 점과 어장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어업을 행하는 자들이 총유하도록 법적 원칙을 수립하였다는 것에 역사적 의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유에 기반한 어업소유권제도의 성립을 확립한 것으로 「어업령」의 제6종 면허어업 도입은 공동체로 어업 권리를 이양하는 그 시작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식민지기 제6종 면허어업은 이후 1953년 공동어업, 1963년 제1종~3종 공동어업, 1995년 마을어업으로 개정되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어업권의 소유변동을 주제로 근대적 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의 발급과 처분에 따른 소유변동 양상을 어업권 통계자료를 통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4

## Introduction of Modern Fishery Law and Change in Traditional Order

4-1

###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Korea's fishery law

Hello, students. I am Song Kyeong-eun, the instructor of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course. In this fourth lesson, we will examine the process of formation of a modern fishery law during the times of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Japanese colonial rule and understand changes in the traditional order of Joseon, that is, traditional ownership relationships.

In the last lecture, I explained the status of fisheries by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I referred to 『The Chronicle of Korean Fisheries』 as the historical material to check on how fisheries were by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right before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I categorized fishery resource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for the explanation about the status of fishery business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I also mentioned that those categories are connected to the shift toward modern fishery laws, the topic for this fourth lecture.

In this week's lesson, we will closely examine the formation of basic fishery-related laws in Korea, from the Fishery Act at the end period of Joseon to the Fishery Ordina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Notably,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introduction of a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which was an act of managing fishery resources' characteristics as shared resources, as well as the risk of their exhaustion, based on ownership system, in terms of institution.





Plus, I will introduce a case of Haenam Yoon family's control of the Maenggol-do Island, to demonstrate the series of processes through which community ownership was create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ew legal system, as well as the aspects of historical changes in which the traditional order from old times accepted such processes.

In Korea,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wa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based on 「Fishery Act」 and 「Fishery Ordinance」. Here, the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refers to the state’s granting of ownership to users following the legalization of the proprietary relationship that vested a right for every object, regarding privately-owned coastal fishing grounds with exclusivity and openly-accessible fishing grounds. Ownership is a legal term of the civil code, which refers to the right to using, profiting, and disposing an object within the legal extent.

Many studies have agreed that the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wa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era. However, few have focused on the process of the shift from old traditional fishing practices toward a modern institu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Notably, if it is true that community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had traditionally existed in the coastal waters of Jose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kind of changes such ownership faced in the introduction of a new legal system during colonization.

However, what should come first is a fundamental analysis of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specified in 「Fishery Act」 and 「Fishery Ordinance」. What I would like to explain today in detail is the introduction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that restricted the body that could acquire rights to a fishing ground only to communities in 「Fishery Ordinance」 and changes in fishing grounds’ ownership caused by such change; this will clarify what “fishing communities” in Korean history that have been only vaguely understood so far were really like.







fishery right was legally institutionaliz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y 「Fishery Act」 enacted in 1908. It is known that 「Fishery Act」 was basically influenced by Japan's 「Former Fishery Act」 whose enactment began in 1902.

To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of that time, advanced fishing techniques were being spread to Korea by Japanese fish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Joseon-Japan Fishing Agreement」 in 1889 during the era of the Korean Empire, which officially authorized Japanese's fishing on Joseon's waters. It is clear that such circumstances required a systematic definition of the right to fishery resources, more appropriate for applying advanced fishing techniques and new ways of using the resources.

「Fishery Act」's text consists of total 16 provisions including 14 articles and two additional clauses and it was proclaimed through 『Official Gazette』 published on November 11, 1908. The provisions of the law defined the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use of fishery resources, by categorizing it into licensed, permitted, and reported ones. The way of granting fishery right in those three categories is maintained until nowadays.

Of course, there had been preliminary works for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o the use of fishery resources before the enactment of 「Fishery Act」 by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ct on Use of Uncultivated National Land」 enacted in 1907 seems to have been the beginning of the work. Article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stated, "In case one who had rent national uncultivated land for business such as cultivation, ranching, planting, salt manufacturing, fish farming, etc. succeeded in the planned business, an official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ies grants the land in question to the renter".





The early scope of uncultivated national land stated in 「Act on Use of Uncultivated National Land」 included not only land but also salt manufacturing and fish farming and the Act stipulated legal acquisition of such land. However, the Act was more like an emergency action taken to prevent government-owned uncultivated land and royal relatives' uncultivated land out of ownerless uncultivated land from being privatized through individuals' cultivation, that is, to nationalize such land.

Then, imperial order No.39 「Transfer of Properties of Department of the Royal Household」 was proclaimed on June 29, 1908, as an action for the same purpose, for nationalization of properties that had belonged to the Department of the Royal Household. At that time, fishing grounds that had belonged to the Department of the Royal Household became nationalized along with other proper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of the nationalization of royal family's properties of that time, in November 1908, 「Fishery Act」 and 「Enforcement Regulation on Fishery Act」 were proclaimed.

A modern fishery system different from the past was introduced by 「Fishery Act」 in 1908 and 「Fishery Ordinance」 in 1911. I already mentioned that 「Fishery Act」 was established based on Japan's 「Former Fishery Act」 by Japanese officials of the Residency-General.

As for the nominal objective and intent of 「Fishery Act」 separately from what is stated in the law, it can be estimated from an official letter sent to Japan's foreign affairs minister Komura Jutaro(小村壽太郎) for a revision of the Korea-Japan fishing agreement, before the proclamation of the law in September 1908.

The letter says, "to let the Korean government enact and implement a law on fisheries this time, to promote the interests of fishers of both Japan and Korea, as well as to pursue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stating that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and the interests of Korean and Japanese fishers.





Before that, Japanese fishing boats' fishing in the seas of Joseon had already been legalized by Article 41 of 「Joseon-Japan Trade Agreement」 in 1883. Right before the enforcement of 「Fishery Act」, 「Korea-Japan Fishing Agreement」 in October 1908 already announced that fishers of both countries could operate fishing business on the other's territory, so Japanese fishers entering into Korean fishing grounds was taking place in stages.

Because the action was taken for fishers to run fishery business in the waters, rivers, bays, rivers, and lakes of the other country through the Korea-Japan Fishing Agreement before the proclamation of 「Fishery Act」, it is evaluated to have been an institutional guarantee for Japanese people's fishing in Korean waters.

Let me first give you a simple explanation of the circumstances in Japan at that time. By that time, Japan was actively considering entering into Korea. Japan claimed to be a great country by expanding to the continent to spread its exploding population, securing natural resources, and expanding export destinations for Japanese products; it was also actively implementing colonization policies for Joseon starting from the enactment of 「Immigration Protection Rule」 in 1894.

As part of such policy, Japan enacted and proclaimed 「Deep-Sea Fishery Promotion Act」 in 1897 as for fisheries, establishing institutional strategies to support Japanese people's fishing on Joseon's waters. However, several problems followed Japanese people's fishing on the waters of Joseon. First, as most of Japanese fishers to fish in Joseon were small-scale and poorly-equipped ones, they were frequently exposed to the risk of distress or accidents that take place on the sea unexpectedly.

Another major issue was the handling of fishes caught in Joseon; fishery products were prone to spoilage during their transportation to Japan, so Japan needed action to establish a fishery base for processing fishes within Joseon. Therefore, more active actions for fishers needed to be taken for realization of Japan's fundamental purpose, the expansion toward the continent.





In addition, the circumstances of those times, wars and growth of capitalism affected such moves. Internally in Japan, many people were migrating to colonies such as Taiwan and Sakhalin, due to population growth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s well as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capitalist economy. In the meantime, Joseon emerged as a strategic point for transporting military food supplies for the Sino-Japanese War and Russo-Japanese War. As a result, Japan began to pay attention to Joseon as the land for active development.

Thus, Japan needed an a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fishery base for Japanese people who migrated to Joseon to operate fisheries, not just temporary fishing. As 「Fishery Act」 enforced in Joseon was established based on Japan's 「Former Fishery Act」 and major provisions of the law granted exclusive fishery right to individuals or cooperatives based on the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and most of all, as the same was applied to Japanese living in Korea, it was a practical institution that enabled fishing by Japanese fishers who migrated to Korea.

In addition, 「Fishery Act」 itself had a significant meaning, as it was part of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modern ownership system for natural resources of Korea by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long with 「Mining Act」 proclaimed in September 1906, 「Act on Use of Uncultivated National Land」 proclaimed in July 1907, and 「Forestry Act」 proclaimed in January 1908.

In this lecture, I explained the background of introducing fishery law in Korea. Next time, I will discuss fishery law and fishery rights system.







## 4-2

## Fishery law and fishery rights system

In the last lecture, I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fishery law in Korea. This time, I will discuss fishery law and fishery rights system.

First, let us look into major provisions of the fishery law.

「Fishery Act」 enacted in 1908 included 14 articles and two additional clauses; Article 1 defined fishery business and fishery right and then fishery right was again defined into licensed, permitted, and reported fishery business in Article 2, Article 9, and Article 10, respectively. Other parts of the law stipulated the time period of the validity of fishery right, restriction of fishery right, actions against conflicts, penalties, etc.

Before I begin the discussion, let me first read the original text of the Act, to give you a more precise legal definition of the fishery business and fishery right stated in 「Fishery Act」 and 「Fishery Ordinance」. First, the fishery business and fishery right defined in Article 1 of 「Fishery Act」. Next, the fishery business and fishery right defined in Article 1 of 「Fishery Ordinance」.

### Fishery Act

第一條 本法에 漁業이라 稱함은 營利의 目的으로 水産動植物을 採捕 又는 養殖을 하는 業을 謂함이고 漁業權이라 稱함은 第二條를 依하여 免許를 受한 漁業을 做하는 權利를 謂함

Article 1. The fishery business in this Act refers to a business of collecting or culturing marine animals or plants for profit, and fishery right refers to the right to the fishery business operated based on a license issued pursuant to Article 2.

### Fishery Ordinance





Article 1. The fishery business in this Ordinance refers to a business of collecting or culturing marine animals or plants on the surface of public waters for profit , and the fishery right refers to the right to fishing based on authorization by the Governor General of Joseon. The fishery owner in this Ordinance refers to a person who engages in fishery business or who has fishery right.

The fishery business defined in 「Fishery Act」 and 「Fishery Ordinance」 has the same meaning, as an act of collecting or culturing marine animals or plants for profit.

However, the fishery right preferentially meant the right to the licensed fishery defined in Article 2 of 「Fishery Act」, while it was focused more on the right to fishing granted by the Japanese Governor General of Joseon in 「Fishery Ordinance」. In other words, while 「Fishery Act」 regarded only the licensed fishery business as the object of granting rights, the scope of fishery right in 「Fishery Ordinance」 encompassed not only licensed, but also permitted and reported fishery businesses.

This is because the law reflected that fishery business that had been privately owned was primarily licensed fishery business. For your information, in this lecture about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Korea's fisheries focusing on the Fisheries Act, the "fishery rights system" can be understood to encompass those three rights specified in 「Fishery Ordinance」. But I would also like to highlight that the focus of my lecture is put on the licensed fishery bus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 trend of the ownership system, one of the main key-words of the lecture.

Let me go back to 「Fishery Act」 again to give you a simple explanation about its major provisions.





First, licensed fishery business means distinguishing exclusive occupancy relations for coastal fishing grounds; permitted fishery business means regulating the restriction or permission of access to the use of coastal fisheries; and reported fishery business means allowing unrestricted use and management of fishing grounds only for small-scale fishery business for personal consumption which does not affect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In conventional legal terms, license includes permission, but the two are distinguished for fishery right; to explain why, you can understand that the licensed fishery right guarantees the exclusivity of the right set on a fishing ground, while permitted fishery right gives a permission to use national fishing grounds.

Next, the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Fishery Act」 i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 Fishery Act

第二條 左開한 種類의 漁業은 農商工部大臣의 免許를 受치 아니하면 做業함을 不得함

- 一. 一定한 水面에 漁具를 建設 又는 敷設하고 一定한 漁期間을 定置하고 做하는 漁業  
(第1種免許漁業)
  - 二. 一定한 區域內에서 捕貝採藻 又는 養殖을 하는 漁業 (第2種免許漁業)
  - 三. 陸地 又는 巖礁等에 地點을 一定하고 漁網을 曳揚 又는 曳寄하는 場所로 하고 一定한 漁期間에 頻數 使用하는 漁業(第3種免許漁業)
  - 四. 一定한 水面을 漁網의 建設 又는 敷設하는 場所로 하고 一定한 漁期間에 頻數 使用하는 漁業(第4種免許漁業)
- 前項外에 一定한 水面에 對하고 資本과 勞力を 費하고 魚類를 集合케 하는 漁法으로서 經營하는 漁業(第5種免許漁業)에 關하는 漁業者의 請願을 依하고 農商工部大臣은 漁業免許를 與하고 此를 保護함을 得함

Article 2 The types of fishery business enumerated on the left side cannot be carried out without a license issued by an official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ies

1. A fishery business that builds or establishes fishing gears on a certain water surface and that fixes them for a certain fishing period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





2. A fishery business that collects or cultures shellfish or kelp in a certain area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3. A fishery business that installs or fixes fishing nets on a certain spot on the land or a submerged rock and that uses them during a certain fishing period (type 3 licensed fishery business)
4. A fishery business that builds or installs fishing nets on a certain spot on the surface of the water and that uses them during a certain fishing period (type 4 fishery business)

As for the type of fishery business operated based on a fishing method of gathering fishes by putting in capital and efforts on a certain spot of the surface of the water other than the methods mentioned above (type 5 fishery business), an official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ies grants a fishing license at the request of a fishery owner and the operator obtains the protection.

The five types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are divided by the degree of guarantee of exclusivity for shared resources;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 is the most exclusive type, while type 3 to 5 licensed fishery businesses require relative lower levels of exclusivity. Simply put,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the stationary fishery that uses fishing weirs, in which fishing gears are used to occupy the surface of water all the time for fishing.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for village fishing grounds to collect of shellfish and kelp which had originally been known as brown kelp farm and laver farms, in which seaweeds such as brown kelp, laver and shellfish such as oysters were cultured or collected.

Type 3 to 5 licensed fishery businesses referred to fisheries that frequently used certain waters, such as a case where a fishing ground was visibly demarcated in practice based on the natural topography of the land or submerged rocks in the waters, a case in which fishing nets are installed on a certain surface of water, and a case of fishing method that puts capital on a certain surface of water to make fishes gather there. These types of fishery businesses are carried out in relatively farther seas than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







Article 4 of the Act specifies a principle of “for the same fishing ground, license for the fishing of the same fishing period and same type of fish is not granted”, highlighting the exclusivity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The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Fishery Act」 is as the following.

#### Fishery Act

第九條 左開의 種類의 漁業은 農商工部大臣의 許可를 受치 아니하면 做業함을 不得함

- 一. 陸地 又는 巖礁等에 地點을 一定하야 漁網을 曳揚 又는 曳寄하는 漁業으로 第二條 第一項 第三號의 漁業에 屬하지 아니한 者
- 二. 風力 汜力 又는 潮流를 依하야 囊網을 水中에 引曳하는 漁業
- 三. 人力을 依하거늘 又는 機力を 應用하고 漁網으로써 魚類를 圍繞하야 漁船에 繰揚하는 漁業
- 四. 潛水器械를 使用하는 漁業
- 五. 第二條 第二項의 漁業으로 免許를 受 치 아니한 者

Article 9 The type of fishery business enumerated on the left side cannot be carried out without permission from an official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ies

1. Those who do not fall in the category of the fishery business stated in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3, which is a fishery business that tows or drags fishing nets on a certain spot on land or a submerged rock.
2. A fishery business that tows a bag net by using wind, steam, or tidal power
3. A fishery business that uses manpower or steam power to encircle fishes with nets and to load them on a fishing boat
4. A fishery business that uses diving gears
5. Those who have not obtained a license for the fishery business specified in Article 3, Paragraph 2





Permitted fishery business included some types of fishing methods not specified in the category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bag net fishery that uses the wind power, steam power, and tidal power, net fishing based on investment of capital on inshore fishing grounds not specifically demarcated including ones that introduced modern fishing techniques, fishing by using diving gears, etc.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permitted fishery business can be understood as turning the open access system before into a restricted use based on the state's permission, in terms of preoccupying ownerless objects by using advanced fishing techniques.

Lastly, other than the licensed fishery business and permitted fishery business, reported fishery business was to grant fishery right to a person who wants to operate a fishery business and makes a report to the chief magistrate. Bare-hand fishing and net casting carried out at freely accessible fishing grounds right in front of villages which incur little damages to nature and which require small efforts for catch were included in this category.

Those three categories of fishery right—licensed, permitted, and reported—that were introduced in 「Fishery Act」 in 1908 were carried over to 「Fishery Ordinance」 in 1911, 「Joseon Fishery Ordinance」 in 1925, and then 「Fisheries Act」 after liberation.

In this lesson, we looked into fishery law and fishery rights system. Next time, we will discuss the enforcement of the fishery ordinance.





### 4-3

## Enforcement of fishery ordinance and types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the last lesson, I explained fishery law and fishery rights system. This time, I will discuss the enforcement of the fishery ord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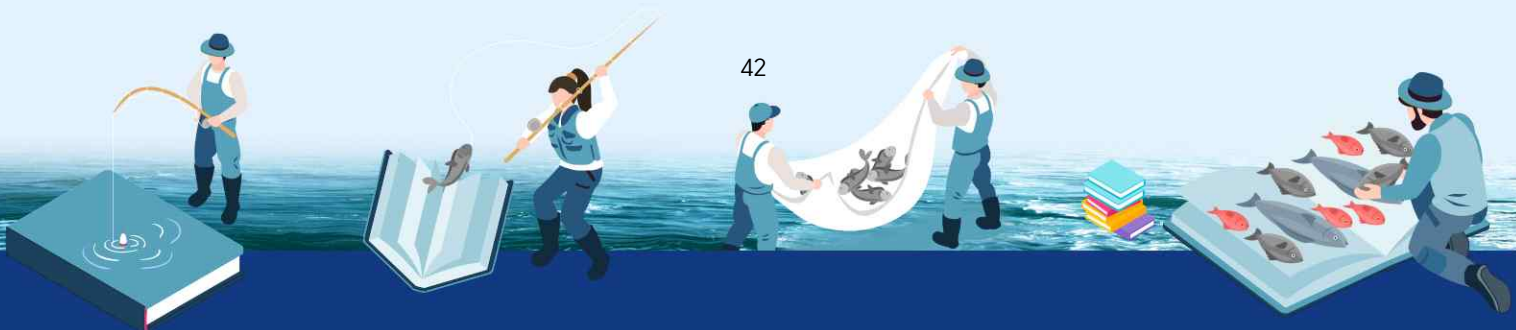
As 「Fishery Ordinance」 was enacted in 1911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Fishery Act」 entered into the process of abolition. However, 「Fishery Act」 enacted during the time of the Korean Empire was the fundamental law for fishery business, as well as the parent law for fishery policies.

「Fishery Ordinance」 in 1911 largely inherited 「Fishery Act」 as it was and the biggest key point was the clarification and revision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and “permitted fishery business” based on the fishing techniques of that time, to be more suitable for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the time.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based on Article 17 and Article 2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Fishery Ordinance」, as the following.

Article 17 Licensed fishery business i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six types in respective subparagraph below:

1.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 A fishery business that builds or installs fishing gears for a certain fishing period at a certain sport of the surface of water
2.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A fishery business that cultures fishery products on a demarcated area on the surface of water
3. Type 3 Licensed fishery business A fishery business that tows or draws nets repeatedly during a certain fishing period at a certain spot on the beach
4. Type 4 Licensed fishery business A fishery business that build or installs fishing nets repeatedly during a certain fishing period at a certain sport on the surface of water





5. Type 5 Licensed fishery business A fishery business that manages facilities that make fishes gather at a certain sport on the surface of water
  6.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A fishery business implemented by occupying surface of water except for the ones stated in the subparagraph above.
- The name of fishery businesses that fall into the categories stated in the subparagraph above shall be announced by the Governor General of Joseon.

The following is the classification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Article 26. As you can see here, there were nine types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Next is reported fishery business.

Article 33 Reported fishery business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s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

1. Type 1 Reported fishery business A fishery business for which three or more crewmen go onboard on a fishing boat and which uses fishing nets
2. Type 2 Reported fishery business A fishery business for which three or more crewmen go onboard on a fishing boat and which uses other types of fishing devices
3. Type 3 Reported fishery business Other types of fishery business that d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subparagraph 2

Type 1, type 3, type 4, and type 5 of licensed fishery businesses were the same as those in the Fishery Ordinance, while type 2 was divided into type 2 and type 6.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Fishery Act」 in 1908 and 「Fishery Ordinance」 in 1911 was licensed fishery business: the new concept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and the specification of the creation of fishing associations which will be explained later.







As for licensed fishery business, five sectors in the past were expanded to nine and new sectors that required regulations following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were included. Plus, permitted fishery business was large-scale fishery business more advanced than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terms of technology and scal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stricted the area of fishing grounds and the time limit for fishing there for some fishery businesses with concerns of overfishing.

As the fishery right in 『Fishery Act』 was defined for licensed fishery business, the fishery businesses for which ownership relationship had traditionally been developed were mostly defined as licensed fishery businesses in 『Fishery Ordinance』. Thus,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this lesson, as it was for the fishery right of fishery owners who engaged in village fishing grounds.

The biggest difference in the licensed fishery business between 『Fishery Act』 and 『Fishery Ordinance』 was the change in type 2 licensed fishery from “a fishery business that collects or cultures shellfish and kelp” to “a fishery business that cultures” and the creation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as “a fishery business implemented by occupying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names of each type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show such change, a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No. 281 issued on August 5, 1911.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original text of the gazette.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 types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list announced in the gazette due to addition of newly-developed fishing gears and methods, but I will explain based on the list in the very first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will help you better understand that different fishing methods and gears were used for each type of the fishery license.





First,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 is implemented by building or installing fishing gears on a certain spot on the surface and fixing them during a certain fishing period.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 included total 23 sub-categories using big blanket net, small blanket net, big flat net, small flat net, string weir, stick weir, pound net, dragnet, trap set net, bag net, set net, swing net on stakes, bag net with baits in it, big net, fishing weir built with wooden stakes and sticks, torrent, fishing screen, fishing weir, straw bag, locking weir, blocking screen, blocking net, wood bridge, and so on. For your information,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 took as much as 60.4% out of fishery licenses newly issued from 1909 to 1921.

Those terms referring to fishing gears and methods may sound professional and unfamiliar, so I would like to take the most well-known example of a fishery business based on fishing weirs. I utilized the information about fishing gears and methods in "Fishing Gears and Methods of Korea" published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he fishing weir, the most well-known of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es, was the traditional fishing method utilized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main material for fishing weir is wooden fences; fixing stakes are driven in a place with big tidal difference, where its floor is exposed or the water level becomes very low at low tides and then bamboo screen or net is laid on them to catch fishes. The water animals that come into the screen or net with the current of rising tide fall into a maze trap and they are caught, failing to go out during the ebb.

In the past in Korea, a large number of bamboo weirs which catch marine animals by a maze trap made of bamboo screen were installed. Let me briefly explain about bamboo weir, the most well-known of the type 1 licensed fishery business.

As seen by this figure, for bamboo weirs, fences are created with bamboo screen to block fishes that come in there from exiting. It is a traditional fishing method that had been utilized for a long period of time; different sizes of wing net and different forms of cylinder, such as netting, is used for part of the device or part of the weir, in different regions.





The gears are usually installed on the mudflat of waters with big tidal difference, strong current, and low water level. First of all, pit woods are driven on the seafloor at regular intervals to put on a wing net in the shape of letter V, and then a bag net is installed on the points of the V.

Its entrance is put in the direction of the drift of current so that fishes enter the bag net following the flow, then fishes trapped in the bag net are caught when flood subsides. In the past, bamboo screen was used for the bag net instead of netting, so it was named screen weir.

Fishes gathered in the bag net are caught by a spoon net twice a day at low tide; in case water is deep even during low tide, a small boat is used. The gears used for a bamboo weir are replaced once in every five years; fishing is operated for 25 days a month to fix the gears. Bamboo weir fishing is carried out on the tideland of the west and south coast usually during March to December and the catch from there included 80% of anchovy and 20% of other fishes on average. Anchovies caught from a bamboo weir are famously called bamboo anchovy.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have four sub-categories: fish culturing, shellfish culturing, seaweed culturing, and mixed culturing, etc. For your information,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accounted for the smallest share at only 3.3% among the type 2 fishery business licenses issued from 1909 to 1921.

The most well-known forms of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is laver farming and fish farming in an enclosing net. That means marine fish farms are installed in an area that can be demarcated and fishes are cultured there. A place demarcated like land is used for it and the object is exclusively owned. I will skip a detailed explanation about laver farming, as you may understand how it is carried out based on your common sense, because it does not require complicated method or gears.





Type 3 licensed fishery business included six sub-categories: sweep net, surrounding net, dip net, draw net, torrential towing net, seaweed towing net. Type 4 licensed fishery business included eight sub-categories: blanket net, set net, blocking net, bent net, anchor net, torpedo net, fish fence, and bay net. For your reference, type 3 licensed fishery business accounted for the second largest share at about 18.9% out of fishery licenses newly issued from 1909 to 1921, while type 4 fishery business accounted for 7.0%.

Type 3 licensed fishery business is towing or dragging fishing nets repeatedly during a certain fishing period at a certain spot on the beach. In this fishing method, nets are towed and then lifted up; type 3 licensed fishery business mostly means catching fishes by enclosing shoals with a sweep net and then pulling it up.

Simply put, it is a fishing method of using the fishing gears to enclose shoals of fishes that move in groups such as anchovies and sardines with a net and pulling it toward the land. The anchovy boat seine and drag nets are the most similar to that fishing method nowadays. As the names of those fishing gears and methods are technical terms, it would be enough to just understand the concepts.

Type 4 licensed fishery business refers to building or installing fishing nets repeatedly during a certain fishing period on a certain spot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most well-known method of this fishery business is using a bay net. Bay nets are used mostly to catch yellow corbina and they are known to have been installed on the sea deeply furrowing into the land. It is a fishing gear and method that catches yellow corbina by installing fishing nets alongside the fishway of the shoals of anadromous yellow corbina. This fishing method remains in the form of stow net and beach seine.







Type 5 licensed fishery business included three sub-categories: feeding, dolphinfish fishing, and fishhook. Type 5 licensed fishery refers to a method of building floating artificial reefs on the sea and catching anadromous fishes such as skipjack, dolphinfish, tuna, and cero that gather there by jigging or trolling. This type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rarely operat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The number of such fishery license actually issued from 1913 to 1921 was zero.

Lastly,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had three sub-categories: private shellfish fishery, private seaweed collection fishery, and private netting fishery. In other words, "seaweed and shellfish collection" deleted from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re-classified into the private shellfish fishery and private seaweed collection fishery in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I will give you a detailed explanation of what it means in the next lesson. For your information, the share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about 10.3% of the type 6 licenses newly issued from 1909 to 1921.

In today's lesson, I explained the enforcement of Fishery Ordinance. Next time, I will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fishery right and its meaning.





#### 4-4

####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right and its meaning

Last time, I explained the enforcement of Fishery Ordinance. In today's lesson, I will discuss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right and its meaning.

These ar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which stipulates about private fishery right.

To summarize, the biggest difference was, first,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Fishery Ordinance」 in 1911 was distinguishing between the seaweed collection and shellfish gathering that had been in the category of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Fishery Act」. As we have already seen from The Chronicle of Korean Fisheries from the period of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in last lecture, while there were some cases of private ownership or collective ownership of seaweed collection, shellfish gathering was carried out at village fishing grounds privately occupied by villagers.

Second, the primary characteristic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that fishery right was granted only to fishing communities, not individuals, which wa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law. This was an unprecedented system of letting only communities occupy and manage shared resources, not individuals who preoccupy them based on practical control. Another important change was the fact that the fishing communities for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had to submit written plans for their management or maintenance.

Let us take a close look into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business. Private fishery business is a term used for the first time in Japan's 「Former Fishery Act」. 「Former Fishery Act」 refers to Japan's first-ever 「Fishery Act」 enacted in 1901. To give you a simple explanation, it was the first-ever applicable law for the fishery rights system in Japan and it had 35 provisions. 「Former Fishery Act」 was then revised into 「Meiji Fishery Act」 with 65 articles in 2010.





To go back to private fishery business again, it refers to the traditional fishery business system of Japan, which means an exclusiv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grounded fishing grounds based on the concept of village's collective ownership under the power of feudal lords. You can understand it this way: a fishing ground ownership relation that had sustained in the name of custom or practice was legalized into private fishery right by 「Meiji Fishery Act」.

This shows how state intervened in the pre-modern way of using fishing grounds which had been maintained by the practical control of feudal lords in line with the beginning of the modern times; it meant state began to grant rights to communities through legal system and control them and such system developed into a modern format.

Both 「Fishery Act」 of the Korean Empire period and 「Fishery Ordinance」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were established based on Japan's 「Former Fishery Act」 and 「Meiji Fishery Act」. However, the two were different in terms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business. Now, let me review previous studies' historical evaluation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business—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that is the biggest distinguisher between 「Fishery Ordinance」 and 「Fishery Act」.

First of all, some argued that the reason why regulations on private fishery business were omitted in 「Fishery Act」, not being applied immediately, was because it pursued early completion of the colonial exploitation structure. Those who argue so also highlight that the omission of private fishery business regulations in 「Fishery Act」 resulted in occupation of major fishing grounds that should have been shared among Joseon's coastal fishers by Japanese fishers who entered Joseon.





They focus on the fact that villages' collective ownership of fishing villages and village fishing grounds, the key of the fishery ownership practice, was neglected, not being incorporated in the new legal system of 「Fishery Act」. Such an argument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raditional fishing communities based on the old coastal fishery business existed in Joseon then. Thus, the existence of "fishing community" is the very key value for their argument.

Others put importance on the fact that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was mainly aimed at helping Japanese immigrant fishers to settle in Joseon and the purpose of the new law introduced the form of associational establishment that had already been implemented in Japan. This argument explains, in the introduction of fishery associations, administrative aspect was considered as well, so that state could play the practical role of managing fishery system.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and associational establishment regulations mentioned above are the core factors of a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In other words, shift from the open access practice—preoccupancy of ownerless objects based on traditional private ownership system and taxation system for fishing grounds—to a modern community-based ownership system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fishery rights system is a very important element. Thus, in my lecture, I will review the point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private fishery system from a critical perspective.

First of all, it is somewhat difficult to accept the point of view that the postponemen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at the time of 「Fishery Act」 led to the dispossession of Joseon fishers' fishery rights by Japanese fishers. It has already been objectively proven by the statistic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that the Japanese expanded fishery productivity and their proportion in the expansion was large in colonial Joseon. It is hard to see that the introduction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and granting of fishery rights to fishing associations by 「Fishery Ordinance」 directly affected the fishery plund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irst, total 924 type 6 fishery business licenses were issued from 1909 to 1921, which was only 10.3% of entire fishery business licenses and most of those fishery owners were locally based and presumed to be the people of Joseon, not Japanese.

In addition, as we learned in last lecture, traditional use of village fishing grounds in Joseon was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f the seaweed collection/shellfish gathering for sedentary fishery resources, fixed fishing gears applied to mobile fishery resources, and fishery using mobile fishing gears.

Notably, as for seaweed collection and shellfish gathering grounds which were the object of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there were cases of private ownership of those fishing grounds attached to the land surrounding islands based on the practical control of noblemen on the land; as such, there had already existed various ownership relations regarding the fishing grounds subject to private fishery business.

Second, while privat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was guaranteed for fixed fishing gears by the law, exclusive and monopolistic rights in a way of allowing open access to far seas that contains fishery resources was not guaranteed for the owners of mobile fishing gear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a legal concept of practical village fishing grounds did not exist in Joseon in institutional terms of ownership and resource management.

In this light, I believe that we need to focus more on the concrete substance, the content of regulation on the private fishery ownership itself as for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of private fishery business by 「Fishery Ordinance」, than on Japanese people's dispossession of Joseon's traditional fishery busin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s pointed out by previous studies.





This table compares regulations regarding private fishery business in Japan and Joseon. It demonstrates the fact that the scope of the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Fishery Ordinance」 enforced in colonial Joseon included seaweed collection, shellfish gathering, and private netting fishery, which was very narrower than that of Japan.

For your reference, let us look into 「Former Fishery Act」, Japan's first-ever modern fishery law. The Act was enacted and proclaimed in 1901. 「Former Fishery Act」 that had 35 articles regarded the entire surface of water as shared surface and introduced fishery rights system in Japan.

In the law,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of fixed fishery right, demarcated fishery right, special fishery right, and private fishery right, while inshore or ocean fishery business were categorized as free fishery business. Notably, village fishing grounds in the front sea of villages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to be managed under joint responsibility of the users of those fishing grounds based on the system of collectiv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while legalizing the principle based on the common of piscary practices of fishing carried out out at sea.

The scope of private fishery business out of the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Japan's 「Former Fishery Act」, which meant the use of village fishing grounds, included fishery businesses carried out by occupying the surface of water along with fixed, demarcated, and special fishery right business, that is, fishery businesses targeting sedentary marine animals and plants such as brown kelp in grounded or inshore waters. In short, Japan's 「Former Fishery Act」 defined sedentary marine animals in village fishing grounds as the object of private fishery business, which was the first-ever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of shared resources based on a principle of granting licenses to their direct users.





Then, 「Meiji Fishery Act」 that revised 「Former Fishery Act」 in 1910 widely expanded the object and scope of private fishery business. First, it renamed village private fishery business as collective fishery business and divided it into type 1-5 collective fishery business. Fishing vessel fishery carried out at village fishing grounds such as netting or fishhook in coastal waters was also included in this category and fishing associations were given the top priority in ownership of common fishery right.

fishery rights system under 「Meiji Fishery Act」, that is collective fishing, became wider than before as it included village fishing grounds in the front sea of villages, while their owners, fishing associations, were the agent of collective ownership and widespread use and management of those fishing grounds.

What was the scope of private fishery business like in colonial Joseon's 「Fishery Ordinance」? Private fishery business was defined as "a fishery business implemented by occupying the surface of water except for those stated in respective subparagraph above" in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of Fishery Ordinance」 and it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rivate seaweed collection, private shellfish gathering, and private netting fishery.

This was based on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in Japan's 「Former Fishery Act」 enacted in 1901 with addition of private netting fishery business. This means that the scope of fishery business competent for fishing associations was wider than that of 「Former Fishery Act」 but narrower than that of 「Meiji Fishery Act」, which applied to only part of 「Meiji Fishery Act」.

As such, it is thought that the result of nationwide preliminary fishery surveys represented by 『The Chronicle of Korean Fisheries』 implemented beforehand was reflected i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of colonial Joseon.





The reason for this was, first, as recorded in 『The Chronicle of Korean Fisheries』, seaweed collection and shellfish gathering were implemented in the form of collective fishery business and such collective fishing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the same way even in case a certain owner existed for a seaweed collection site—brown kelp farm.

As for certain seaweed collection sites privately owned by individuals like land as so-called brown kelp farm with great economic values, of course, the scope of their users was expanded to nearby areas in some cases, but that was rather exceptional.

Second, private ownership was developed for fixed fishing business represented by fishing weir. That is why including them in the category of village fishing grounds was a risky action that would bring about backlash from those with vested interests.

Most of all, it would have been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that if Joseon fishers in coastal areas collectively owned the front seas of their villages exclusively at a similar degree to that of Japan's 『Meiji Fishery Act』, that would have conflicted with the fishery right of Japanese fishers who have newly immigrated to Joseon.

In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that had already been enforced in Japan according to 『Former Fishery Act』 was transplanted for fishery businesses of collectively profiting from shared resources in colonial Joseon. At the same time, its scope was limited to only some fishery businesses, considering the result of nationwide fishery surveys through 『The Chronicle of Korean Fisheries』, as well as the policy for Japanese fishers' immigration to Joseon.

Its difference from Japan was the narrowed scope than that of Japan's 『Meiji Fishery Act』 and addition of "private netting fishery business" in 『Meiji Fishery Act』 to "seaweed collection and shellfish gathering" which were the object of private fishery business in 『Former Fishery Act』, to open the possibility for migratory fishery resources to be included in the object of private fishery business too.







Legalizing shared resources in colonial Joseon was not limited to marine resources. The same way was applied to forestry as well. 「Forestry Ordinance」 was proclaimed and implemented in 1911; “common of piscary practice” similar to that of private fishery in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stated in it. “Common of piscary practice” is a way of collective ownership developed in pre-modern Japan and it was established in earnest in colonial Joseon through 「Forestry Ordinance」.

At that time, forests in Joseon were being devastated due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ownerless mountain, that is, the practice of open access. To resolve such a proble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troduced the “common of piscary practice” that was being implemented in Japan as a new standard. This means that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establishing a institutional management system for major shared resources such as forests and fishing grounds during the colonial era, the new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by transplanting existing institutions of Japan. The agent of managing shared resources as for forestry was defined as communities in the same way with fisheries.

However, for the scope of its implementation, Japanese institution was not directly applied to Joseon,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Joseon at that time. This i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the object and scope of private fishery business in Joseon during the colonial era was narrower than that of Japan’s 「Meiji Fishery Act」 in the sector of fishery business, and that the new system of the common of piscary practice stated by 「Forestry Ordinance」 was applied only to national forests in Joseon while it was applied to privately-owned forests as well in Japan.

Next, I would like to review the role of fishery associations, the main agent of fishery right from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As the scope of collectively-owned fishing grounds based on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was limited in 「Fishery Ordinance」, the role of fishery associations that had the preferential fishery right on them had to be legally reduced technically, but their role rather encompassed a wider scope.





Article 6 of 「Fishery Association Rule」 announced along with 「Fishery Ordinance」 in April 1912 stipulated compulsory joining of fishery association by local fishery owners by stating, "An association can be established with a permission. When an association is established, all the fishery owners residing in that district shall join it". The same role with the fishery association stated in 「Meiji Fishery Act」 that had been enforced in Japan at that time was applied to the fishery association in Joseon practically.

Such disparity caused confusion between fishery associations as the fishery owner of the private fishery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and fishery association as an agent of ruling administration that manages local fisheries. That is why many researchers have evaluated the fishery rights system and exploitation similarly.

Of course, it is thought that the fishery association system that had already been operated in Japan at that time worked as a window to support Japanese fishery owners who immigrated to Joseon, giving a positive influence to their settling. It also seems that fishery associations played the role of practical administrative agent that managed fisheries system during the colonial era based on the state's authorization.

The designated association system introduced in 1929 i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Designated fishery associations were "an association designated by the Governor General of Joseon in case it is recognized to be necessary for pursuing sound development of associations", so they were operated by a director appointed and paid by the governor of respective provinces. From such a point of view, it is hard to rule out the perspective that saw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and fishery association provision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Fishery Ordinance」 were for fishery exploitation for colonial control.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establishment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should be discussed from a more fundamental point of view, that is, formation of a fishery ownership system that legally defines collectiv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In institutional terms,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needs to be re-evaluated in that it did not grant fishery rights to individuals and it mandated submission of a “plan for the management or maintenance of fishing villages” that had not been required for type 1-5 licensed fishery businesses as an attachment for application for the license.

This time, I explained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right and its meaning. Next time, I will discuss the fishery rights system in the Fishery Act and the process of changes in existing community fishery village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fishery rights system in the Fishery Ordinance, by taking an example of a fisherman of the Maenggol-do Island.





## 4-5

### Application of Fishery Act and life of fishers : private fishery right and community fishery (Maenggol-do Island's case)

Last time, I explained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right and its meaning. This time, we will look into a case of a fishers of the Maenggol-do Island to understand the change in community fishery busines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ishery right, which is deep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Fishery Act and the lives of fishers.

Here, I will introduce a case of fishery right conflict between a traditional private owner and a collective owner during the colonial rule after the creation of community ownership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out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Fishery Ordinance」 explained so far. Based on the explanation, I would like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fishery rights system and community fishery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To summarize the key point of the previous lessons, private fishery business was classified as type 2 in 「Fishery Act」 in 1908, based on which rights could be granted to individuals.

However, after the creation of private fishery right by 「Fishery Ordinance」, the right to seaweed collection and shellfish gathering from village fishing grounds was legally granted only to fishing associations or fishing communities, which was the key change. The change process in the fishery rights ownership relationship on the Maenggol-do Island demonstrates the most glaring case of such change.







The historical record utilized for my explanation about the fishery right conflict in the Maenggol-do Island is an old document from Haenam Yoon family, which was contained in 『Compilation of Old Documents II-Haenam Yoon Family I』. The document is from a compilation of documents written in the process of Haenam Yoon family's exertion of ownership surrounding the Maenggol-do Island and local residents' resistance against taxation from the period of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until mid 1920s, which has been preserved by the Haenam Yoon family. Researchers including An Seung-joon, Lee Jong-gil, Jeong Yoon-seob, and Kim Hyeon-young have utilized the document for their studies.

The Maenggol-do Island is an island on the sea 53 kilometers away from Jindo of Jeollanam-do Province into the southwestern direction. The Maenggol-do Island had long been privately owned and used by Haenam Yoon family, a provincial noble family.

Part of Haenam Yoon family's ownership of the Maenggol-do Island was hard to be recognized based only on the existing document; but the argument that the Maenggol-do Island had been owned by the Yoon family from the generation of Yoon Ho-jeong was accepted based on a petition written and submitted in March 1687, based on which Haenam Yoon family's ownership of the island from their ancestors during the time of the Joseon Dynasty was authorized.

That became the foundation for a 400-year-long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and the residents of the island who paid farm rents to Haenam Yoon family. You can understand that Haenam Yoon family had practically owned and exerted control over the Maenggol-do Island for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as the island became subject to 「Fishery Act」 in 1908, such relationship faced a demand for change.

First of all, fishery right had to be obtained for an exclusive use of the coastal fishing grounds of the Maenggol-do Island. Before the enactment of 「Fishery Act」, the right to the coastal fishing grounds around the island was attached to the land, so there had been no ownership regarding fisheries.





However,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legal system in the 20<sup>th</sup> century, fishery right began to be treated as another right separate from land ownership. Thus, Yoon Jeong-hyeon applied for and obtained type 2 seaweed collection license No. 1344 on the coastal fishing grounds of the Maenggol-do Island as of November 6, 1911 in the form of an individually-owned license.

Whether Haenam Yoon family acquired other fishery rights than the type 2 seaweed collection for the coastal waters around the Maenggol-do Island is not clarified by 『Compilation of Old Documents II-Haenam Yoon Family I』. That is because the record had another purpose and characteristic: it complied with handling conflicts regarding fishery right.

As I have already mentioned in previous lessons several times, seaweed collection license out of the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had to be changed into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according to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newly introduced for the revision of 「Fishery Act」 in 1908 into 「Fishery Ordinance」 in 1911. If Haenam Yoon family had owned other fishery rights than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there would have been no legal problem for the family to acquire the right individually. Then, there would have been no possibility of conflict occurrence and collection of records would have been unnecessary. However, what they wanted to acquire was subject to type 6 licensed fishery right.

Under 「Fishery Act」 of 1908 anyway, Haenam Yoon family who had practically owned and controlled the fishery right to the seaweed fishing grounds around the island from long ago was able to register as a legal individual fishery right holder.

However, five years later, the fishery right expired on December 21, 1916. Issuance of individually-owned licenses became impossible under the revised 「Fishery Ordinance」, as seaweed collection license could only be collectively owned under the new law. Yoon Jeong-hyeon applied for renewal of the term of existence for the family's fishery right in line with the type 2 seaweed collection license, but the application was rejected. Then, he applied for individual type 6 license for the same fishery right again.





In that process, Yoon Jeong-hyeon of the Haenam Yoon family received a petition from the residents of the Maenggol-do Island that said “We have lived well thanks to the help of the Yoon family, and because the family takes a good care of us, it is our happiness for Mr. Yoon’s family to acquire the license and for us to live as his tenants” and submitted it along with the evidentiary documents of the ownership of the island, but the application was rejected as type 6 licensed fishery right could not be granted to an individual.

This is a good example of the legal sense of fishery rights held by noblemen who practically controlled fishing grounds in early 20<sup>th</sup> century when a modern legal system was being introduced. This case also shows that understanding the licensed fishery rights system, an awareness of modern law, and the strictness of systems based on it need to be improved.

What I would like to highlight here is that fishing grounds subject to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under 「Fishery Ordinance」 became practically impossible to be owned individually and only collective ownership by communities was authorized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despite continuous efforts of fishery right holders who had practically owned the fishing grounds for over 400 years.

Eventually, Yoon Jeong-hyeon of the Haenam Yoon family adopted the second-best alternative for control of the fishing grounds by obtaining type 6 fishery business license No.6973 by submitting a new application for licensed fishing business with signs of 42 local residents and specifying Lee Eung-seon and Yoon Joo-hyeong as co-representatives.





This is what wa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regarding Haenam Yoon family's licensed fishery right to the Maenggol-do Island. The type 2 fishery business license No.1344 owned by Yoon Jeong-hyeon expired as of November 5, 1916, and then type 6 fishery license was issued for him as of May 20, 1918. The fishery right holder of the new license was not individual Yoon Jeong-hyeon, but local fishery owners who were seaweed collectors of the Maenggol-do-ri village. Though perfunctorily, the license of private fishery rights was issued as collective ownership.

Even though the fishing ground became collectively owned by multiple fishery owners who were specified with the traditional and real owner, the ownership that had practically been maintained until then was not denied immediately.

According to a contract on the right to benefit from the use of the Maenggol-do Island and its annexed islands including the Juk-do Island and Gwak-do Island which was written in 1907, payment of 254 yen for 26.4 bags of brown kelp, 44 yen for 17.15 straw bags of barley and 1,100 pieces of glue plant, as well as payment of 13.4 bags of dried fishes, 250 pieces of abalone, 4 pitchers of salted large-eyed herring, 200 pots of green laver and 30 pots of laver, and 5 pieces of fish oil were specified. Such customary ownership that had been tacitly recognized in fishing villages was sustained until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1930s though weakly.

This is a local article about the sufferings of the residents of the Maenggol-do Island, which was published in the Dong-a Ilbo newspaper on October 16, 1935. It was about the hardship for the residents of the island who had to pay excessive amount of rent.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district's residents were tenants of a man living in Haenam-gun county; they had to pay half of the harvest from the farms while separately paying the land rents.







Other than that, 17.75 straw bags of barley, 55 bags of brown kelp, 7 bags of brown rock kelp, 14 bags of shark, 300 pieces of amberjack, 5 pieces of fish oil, 30 bundles of rock laver, 4 pitchers of salted large-eyed herring were imposed, whose total value amounted to 483.70 won. It shows that the rent imposed on the residents of the Maenggol-do Island still included the payment of fishery products. Such customary ownership relationship was sustained until 1935.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owner of fishery right changed while the customary ownership relationship was sustained. In other words, 42 residents of the island became joint fishery right holder in terms of legal institution according to 「Fishery Ordinance」 and the Haenam Yoon family who exerted practical control was specified as one of the holders of the common of piscary.

What happened in the Maenggol-do Island back then is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of the shift from individual ownership to collectiv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that had been customarily owned in annexation to the land of islands based on ruling power that had been sustained traditionall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though perfunctorily .

Notably, 33 type 2 seaweed collection licenses No. 1328-1345 were expired in similar circumstances to that of the Maenggol-do Island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to know whether they were replaced with type 6 fishery license afterwards, but it is estimated that they shifted to a type of ownership similar to that in the Maenggol-do Island. In such context,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of type 6 licensed fishery in 「Fishery Ordinance」 can be evaluated as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institutional collectiv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which transferred fishery rights to communities.





In this lesson, I reviewed the process of modern fishery right ownership system's introduction, notably explaining how the introduction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that allowed only "fishing communities" to occupy fishing grounds—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actually affected the ownership relationship surrounding fishing grounds.

I tried to clarify that rights were granted to communities that actually carried out fishery business through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under 「Fishery Ordinance」, as the "common of piscary practice" was cre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forest ownership system during the era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summary, the fishery rights system introduc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derived from Japan's fishery law. 「Fishery Act」 introduced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was Korea's first basic fishery law regarding fisheries, which created the framework for licensed, permitted, and reported fishery business.

Ordinance」 in 1911 in only three years of its enforcement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key point of the revision was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of private fishing grounds, through which regulations on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fishing associations mandated only communities in Joseon to be able to be fishery right holders. This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organizing the system of ownership not only for fishery business but also for all types of shared resources including forests during the era.

However, the scope of private fishing grounds specified in 「Fishery Ordinance」 was limited to part of fishing grounds such as private seaweed collection, shellfish gathering, and netting fishery, which was narrower than that of Japan's system that let fishing communities collectively own most of the fishery businesses implemented in village fishing grounds. In other words, the new system was not applied to the private ownership of fixed fishing gears that had been customarily permitted.





This seems to be the result from a careful consideration of Joseon's traditional fishery business in which private ownership of fixed fishing gears had developed, as well as Japan's policy for Japanese fishery operators' immigration to Joseon. The latter has become the ground for an argument that the fishery rights system was aimed at Japan's exploitation of Joseon's fisheries. Unfortunately, such an argument led to relatively insufficient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itself.

That is why I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fishery business system during the colonial rule er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rmation of a new fishery ownership system that legally defined collective ownership, not from the point of view that sees the system as the tool for exploitation during the colonial rule.

The case of Haenam Yoon family's control of the Maenggol-do Island needs to be reinterpreted in this light. In other words, the new system was historically meaningful in that the traditional view of fishing grounds as annexed to land was changed by 「Fishery Ordinance」 to see fishing grounds and land as two different objects of ownership, and in that a legal principle was established for those who actually implemented fishery business, not landowners, to collectively own fishing grounds.

That was the establishment of a fishery ownership system based on sharing, so I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through 「Fishery Ordinance」 needs to be re-evaluated as the beginning of transfer of fishery rights to communities. For your reference, type 6 licensed fishery busin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revised into joint fishery business in 1953, type 1-3 joint fishery business in 1963, and then village fishery business in 1995 to be carried over to these days.

In the next lesson, I will examine the trend of change in ownership shown in the issuance and disposition of fishery rights following the modern fishery law based on fishery right statistic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ownership of fishery right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fishery law. This is the end of the fourth lectur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4周

## 近代渔业法的引入和传统秩序的改变

4-1

### 韩国渔业法的引进背景

同学们好，我是担任《韩国渔业发展史》讲座的宋庆殷。本次讲座是第四堂课，我们来看一下韩末和殖民地时期近代渔业法的形成过程，并依据这些制度的引进对当时朝鲜传统的所有权关系，即传统秩序的变化为主题进行介绍。

之前的课程中我们已经了解过韩末的水产业情况。此次讲义中使用的史料是《韩国水产志》，通过相关资料可以确认近代渔业权制度引进之前的韩末时期水产业的情况。

特别是观察韩末的水产业实际情况时，根据水产资源的特性进行了区分说明，这是与韩国水产业发展史上的第四讲主题——近代渔业法的实施相联系的纽带，在上一堂课也有表述。

本次讲座详细介绍了旧韩末渔业法到殖民地时期渔业令的韩国水产相关基本法的形成过程。特别是，将强调第一堂课中强调的水产资源的代表性特征——公共资源，以及强调因其具有枯竭危险性而引进以所有权体系即专用渔业制度的部门。

同时，通过海南尹氏家族的孟骨岛支配案例，确认了随着法律制度的引进，创造共同体所有制的一系列过程，特别是从过去就存在的传统秩序逐渐接受这一过程的历史变化情况。

在韩国，近代渔业权制度是殖民地时期建立的，以《渔业法》和《渔业令》为基本法。这里的“近代渔业权制度”是指，对于排他性的由私人占有的沿海渔场或原本可以自由进入的渔场，授予合理化的一物一权的权利关系，同时国家赋予使用者所有权。所有权是民法中的用语，是指在法律范围内具有使用、收益、处理的权利。





在几项先前的研究中,对殖民地时期“近代渔业权制度”的建立没有异议。但是,由于引入该制度,而从传统渔业惯例向近代化制度过渡的过程并没有得到太多关注。特别是,如果传统朝鲜的沿海地区存在共同体所有制,那么有必要研究这种性质的所有关系在殖民地时期法律制度的引进过程中经历了怎样的变化。

但在此之前,我认为首先要解决的问题是对《渔业法》和《渔业令》规定的近代渔业权制度作出根本性分析。虽然今天的讲座中也会详细说明,特别是在《渔业令》中,将取得渔场的权限主体限制为共同体的“第6种渔业许可”的引进和由此带来的渔场所有关系的变化,将明确之前一直被认为是模糊的韩国历史中的“渔业共同体”的实体。

1908年制定的《渔业法》是韩国首次将渔业权进行法律制度化。据悉,《渔业法》从1902年开始着手修订,当时受到了日本《旧渔业法》的基本影响。

从当时的时代状况来看,1889年大韩帝国时期,是对于日本在朝鲜海域渔圈正式通渔认证的《朝鲜日本两国通渔章程》引进后,日本渔民开始向韩国传播先进渔业技术的时期。也就是说,很明显当时正是需要对适合先进渔业技术应用和资源利用方式的渔业资源进行系统化确权的时期。

《渔业法》由正文14条和附则2条,共16条组成,通过隆熙2年1908年11月11日的《官报》公布。该法律的主要内容是,对渔业资源的利用,区分为执照、许可、届出(简单来说就是申报)等类,规定其权利关系。渔业权的上述三种赋予方式一直延续到了现代。

当然,在韩末《渔业法》制定之前,并不是完全没有对水产业,即对水产资源的使用权利进行规定的事前工作。1907年《国有未垦地利用法》即是开始。根据这项法律施行细则第1条,明示了“为了开垦、畜牧、植树、制盐、养鱼等事业,获得国有未开垦土地的租赁者在成功完成预定事业项目时,农商工部大臣对获得该租赁者授予相应土地”。

《国有未垦地利用法》初期国有未垦地的范围中,不仅包括土地,还包括制盐和养鱼,对上述合法取得作出规定是相同法律的主要内容。但这项法律是防止官方所有的尚未开垦的土地即官方未开垦地、以及没有主人、一次也没有耕种过的土地即无主人闲旷地中由官房所有的未开垦地因个人开垦而私有化,即具有为了将这种土地国有化而采取紧急措施的性质。





随后,作为同一目的连续措施,1908年6月29日敕令第39号《关于宫内府归属财产的移属事宜》被推进成为宫内府所属财产国有化的方案。当时属于宫内府的渔场也和其他财产一起被国有化,在这种当时王室财产国有化措施的背景下,1908年11月颁布了《渔业法》和《渔业法施行规则》。

通过1908年《渔业法》和1911年《渔业令》,韩国引进了与以往不同的近代渔业制度。之前也提到过,《渔业法》由统监府下的日本官员借用日本的《旧渔业法》制定。

首先,抛开法律上的具体规定,《渔业法》的名义目的和宗旨,可以通过1908年9月颁布此法之前,为了修改韩日通渔的相关协定,向日本外务大臣小村寿太郎发送的公函中看出。

主要内容是“为了促进韩国渔业的发展,增进日韩两国渔民的利益,让本届韩国政府制定并实施渔业相关法规”,通过相关文件表明该法在韩国是为了发展渔业和增进日韩渔民的利益。

早在1883年,日本渔船就根据《朝日通商章程》第41款的规定在朝鲜海合法通渔。当时在《渔业法》实施之前,1908年10月通过《韩日渔业协定》对两国渔民可在对方领土上经营渔业等进行了公布,日本渔民就已在逐步分阶段进入韩国。

因此,《渔业法》在颁布之前,根据韩日渔业协定,两国渔民在对方国家沿海、江、湾、河川及湖面上采取了扩大通渔范围的措施,这点被认为对日本人在朝鲜通渔实行了制度性保障。

简单说明一下当时日本的情况。这个时期日本正在积极考虑进军韩国。日本为扩大不断膨胀的人口、确保自然资源及扩大日本出口市场,鼓吹大陆膨胀性大国主义,从1894年制定《移民保护规则》开始,积极推进对朝鲜的殖民政策。

作为其中的一环,1897年制定并颁布了《远洋渔业奖励法》等,正在制定对朝鲜海通渔支援的制度措施。但是日本人的通渔却伴随着以下各种问题。首先,由于大多数渔民以个体渔民为主,在海洋中频繁出现意外和事故风险。

此外通渔后渔获物的处理也成为了主要问题,由于水产品腐败快的特性,在运往本国日本的途中有可能导致渔获物变质,因此急需在朝鲜建立加工处理商品的渔业根据地。也就是说,为了实现大陆膨胀的根本目的,需要为通渔人群采取更积极的措施。







另外，战时和资本主义复兴的时代形势也对此产生了影响。日本内部在日俄战争后，随着人口增加和资本主义经济的引进及发展，台湾、库页岛等殖民地形态的移居盛行。在这种情况下，由于中日、日俄战争等原因，朝鲜成为军需粮食调配处，当时日本开始将朝鲜视为一个活跃的开发基地。

因此，日本需要采取措施，在朝鲜建立日本人渔村根据地经营渔业，而不是单纯的通渔。此外，朝鲜实施的《渔业法》是模仿日本的《旧渔业法》制定的，其主要内容是通过近代渔业权制度赋予个人或团体排他性渔业权，同时适用于居住在韩国的日本人，是实现日本人在朝鲜渔业移居的实质性制度。

同时《渔业法》本身就很有意义，制定《渔业法》是和1906年9月颁布的《矿业法》、1907年7月颁布的《国有未垦地利用法》、1908年1月颁布的《森林法》等一起在旧韩末时期韩半岛引入自然资源近代所有制度的一系列过程之一。

本节课我们了解了韩国渔业法的引进背景。下一节课我们将了解渔业法和渔业权制度。





## 4-2 渔业法和渔业权制度

上一节课我们研究了韩国渔业法的引进背景。本节课我们来看看渔业法和渔业权制度。

首先让我们详细了解一下《渔业法》的主要内容。1908年制定的《渔业法》正文14条、附则2条,其中第1条对渔业和渔业权作出定义,第2条、9条、10条再次规定渔业权为免許渔业、渔业许可、申报渔业三个部门。其他部门包括渔业权存续期限、渔业权限制、纠纷措施、处罚等。

在正式讨论之前,有必要再次明确下《渔业法》和《渔业令》对渔业和渔业权的法律定义,因此,我们将阅读原法律条文。首先是《渔业法》第一条所定义的渔业和渔业权。接下来是《渔业令》第一条中定义的渔业和渔业权。

### 어업법

第一條本法에漁業이라稱함은營利의目的으로水産動植物을採捕又는養殖을하는業을謂함이오漁業權이라稱함은第二條를依하여免許를受한漁業을做하는權利를謂함

### 渔业法

第一条本法所称渔业,指以营利为目的,采捕或者养殖水产动植物的业种。所谓渔业权,是指依照第二条规定取得执照从事渔业的权利。

### 渔业令

第1条本令(本条例)所称渔业,是指在公共水域上以营利为目的采捕或养殖水产动植物的业种,渔业权是指经朝鲜总督许可而从事渔业的权利。本令所称渔业者,是指从事渔业的人和拥有渔业权的人。

《渔业法》和《渔业令》中对渔业的定义相同,是以营利为目的采捕或养殖水产动植物的行为。

但是渔业权在《渔业法》中首先侧重同法第2条定义的免許渔业权利,在《渔业令》中,焦点在于朝鲜总督授予捕捞权,这一点有所不同。也就是说,《渔业法》只将免許渔业视为权利赋予对象,而《渔业令》中渔业权的涵盖范围扩大到免許、许可、申报。





可以推测,《渔业法》反映了自古以来私有渔业的主要形式是免許渔业。作为参考,以渔业法为中心进行的韩国水产业发展史讲座中的“渔业权制度”可以理解为包括“渔业令”三种权利的概念。但是,从本课程的主要关键词所有权体系的历史趋势来看,本课程重点讨论的是免許渔业。

重新回到《渔业法》,简单说明一下主要内容。

首先,免許渔业是指对沿海渔场的排他性占用,渔业许可是指规定限制和允许进入近海捕鱼,申报渔业是指仅限于不影响破坏自然资源总量的生计型渔业,允许渔场自由利用和管理。

通常,从法律意义上来说,免許也包括许可,但对渔业权进行了区分,因此要区分说明的话,免許渔业权是对渔场的设权行为的排他性保障,许可渔业权是对国有渔场的许可利用。

其次,在《渔业法》中,免許渔业分为五类。

#### 渔业法

第二條左開의 種類의 漁業은 農商工部大臣의 免許를 受치 아니 하면 做業 함을 不得 함

一. 一定의 水面에 漁具를 建設 又는 敷設 하고 一定의 漁期間을 定置 해야 做하는 漁業  
(第1種 免許 漁業)

二. 一定의 區域內에서 捕貝 採藻 又는 養殖을 하는 漁業(第2種 免許 漁業)

三. 陸地 又는 巖礁等에 地點을 一定 해야 漁網을 曳揚 又는 曳寄 하는 場所로 하고 一定의 漁期間에 頻數 使用 하는 漁業(第3種 免許 漁業)

四. 一定의 水面을 漁網의 建設 又는 敷設 하는 場所로 하고 一定의 漁期間에 頻數 使用 하는 漁業(第4種 免許 漁業)

前項外에 一定의 水面에 對해 資本과 勞力을 費하고 魚類를 集合케 하는 漁法으로서 經營 하는 漁業(第5種 免許 漁業)에 關해서는 漁業者의 請願을 依해 農商工部 대신은 漁業 免許를 與하고 此를 保護 함을 得 함

第二条左侧所列的渔业种类,若未经农商工部代理获得免許,不得进行捕捞。

一、在固定水面建设或铺设渔具,固定渔期的渔业(第1类免許渔业)。

二.在一定区域内进行捕贝采藻或养殖的渔业(第2类免許渔业)。





三.在陆地或礁石等指定地点,将渔网作为曳扬或曳寄的场所,在一定渔期内反复使用的渔业(第3类免許渔业)。

四、以一定水面作为渔网建设或铺设场所,在一定渔期内反复使用的渔业(第4类免許渔业)°除了上述以外,对特定的水面支付资本和劳力,利用使鱼类集合起来的捕鱼方法来经营的渔业(第5类免許渔业),根据渔业者的请愿,农商工部大臣授予渔业捕捞许可证和保护°。

上述免許渔业的五个部分按公共资源排他性保障程度划分,第一类免許渔业的排他性最强,第三至第五类免許渔业的排他性要求相对较低°简而言之,第一类免許渔业包括使用渔具恒常占用水面进行捕捞的渔箭等定置型渔业°。

第2类免許渔业是现有被称为藪田、苔田和村前采藻及捕贝地的许可证,包括养殖或采集海带、紫菜、牡蛎等海藻类和贝类°。

此外,第3类免許渔业~第5类免許渔业是指以陆系的自然地形或水系暗礁等为基础,按照惯例划定可视性渔场时,在一定的水面上设置渔网时,以及在一定的水面上投入资本并以聚集鱼类的渔法等频繁利用特定水系的渔业°比起第1类免許渔业,在更远的海域进行°。

并在该法第4条中,以“同一渔场不得经营同一鱼期、同一鱼类的渔业”为原则,再次强调经营免許渔业的排他性°《渔业法》中对于渔业许可的规定如下°。

#### 渔业法

第九條左開의 種類의 漁業은 農商工部大臣의 許可를 受치 아니 하는 做業을 不得함

一.陸地又는 巖礁等에 地點을 一定 하는 漁網을 曳揚又는 曳寄 하는 漁業으로 第二條第一項第三號의 漁業에 屬하지 아니 하는 者

二.風力汽力又는 潮流를 依 하는 囊網을 水中에 引曳 하는 漁業

三.人力을 依 하는 거는 又는 機力을 應用 하고 漁網으로 魚類를 圍繞 하는 漁船에 操揚 하는 漁業

四.潛水器械를 使用 하는 漁業

五.第二條第二項의 漁業으로 免許를 受치 아니 하는 者

第九条左侧所列的渔业种类,未经农商工部大臣许可,不得进行渔业

一、在陆地或礁石等指定地点,曳扬或曳寄渔网,不属于第2条第1项第3号渔业从业者







- 二.利用风力汽力或潮流在水下拉网捕鱼的渔业
- 三.利用人力或机力，用渔网围住鱼类，在渔船进行操扬的渔业
- 四.使用潜水器械的渔业
- 五、根据第二条第二项中渔业未取得许可证者。

渔业许可包括部分免許渔业未作规定的渔业、利用风力、汽力、潮流的囊网渔业、引进近代渔业技术等，资金投入到未划定近海渔场的渔网渔业和潜水器渔业等。也就是说,渔业许可利用发达的渔业技术抢占无主物,可以看作是国家用许可权限制了之前的自由准入制度。

最后，申报渔业是除规定为免許渔业和渔业许可之外的，拟开展捕捞作业的，可通过申报府尹获得捕捞权。主要在靠近村庄的渔场进行，例如徒手渔业、撒网渔业等资源破坏少、捕捞工作量低的生计型渔业属于这一类。

1908年在《渔业法》中首次引进的免許、许可、申报三种渔业权制度，延续到1911年的《渔业令》、1925年的《朝鲜渔业令》，解放后在《水产业法》中也一直沿用至今。

本节课我们了解了渔业法和渔业权制度。下节课我们来看看渔业令的施行情况。







#### 4-3 渔业令的施行和渔业许可的种类

上一节课我们了解了渔业法和渔业权制度。本节课我们来看看渔业令的施行情况。

韩日合并后,随着1911年制定《渔业令》,《渔业法》进入废除程序。但大韩帝国时期制定的《渔业法》是后来渔业的基本法和渔政的母法。

1911年《渔业令》在大框架下继承了《渔业法》,重点是将免許渔业和渔业许可根据当时的渔业技术,根据实际情况具体化修订。

免許渔业的具体分类依据《渔业令实施细则》第十七条、第二十六条规定如下。

第十七条免許渔业分为以下各号共6种。

- 一、第一类免許渔业是在一定水面建设或铺设渔具,在一定捕捞期间内进行的定置渔业。
  - 二、第二类免許渔业是划定水面进行养殖的渔业。
  - 三、第三类免許渔业是海滩的某一地点,在一定的渔期内反复曳扬或曳寄渔网的渔业。
  - 四、第四类免許渔业是在一定水域内,在一定的渔期内反复建设或铺设渔网进行的渔业。
  - 五、第五类免許渔业是在一定水面经营集合鱼类的设施的渔业。
  - 六、第六类免許渔业是除了前述各项所列外,专用水面进行的渔业。
- 前项所列种类的渔业名称,由朝鲜总督公告。

以下为第二十六条渔业许可的分类。如画面所示,渔业许可有9种。接下来是申报渔业。

第三十三条申报渔业可分为以下3类。

- 一、第一类申报渔业,每艘渔船载客3人以上,使用渔网捕捞。
- 二、第二类申报渔业,每艘渔船载客3人以上,并使用延绳和其他钓具的渔业。
- 三、第三类申报渔业,即不属于前两类的渔业。





免許渔业의第1类、第3类、第4类、第5类与《渔业令》相同,第2类则分为第2类和第6类。1908年《渔业法》和1911年《渔业令》的最大区别是作为免許渔业增加了第6种渔业许可,并规定了后述的渔业组合(渔业协会)的设立。

在渔业许可方面,将现有的5个部门扩大并重组为9个部门,随着先进技术的引进,需要进行渔业监管的部门也包括在内。并且,渔业许可在技术、规模上较免許渔业更为先进,可以确定对部分可能出现滥捕的渔业,由总督府自行对渔区划定和限量捕捞作出了规定。

正如之前《渔业法》中渔业权被定义为免許渔业对象一样,在《渔业令》中传统上所有制关系发达的渔业大部分都向免許渔业过渡。因此,本讲座将缩小话题范围,以免許渔业为中心,重点放在“地先渔场”(即与海岸线相邻的渔场)从事捕捞作业的渔民的渔业权范围进行讨论。

免許渔业部门《渔业法》在向《渔业令》逐步实行中最大的特点,具体来说,是以往的第二类免許渔业由“捕贝采藻或养殖的渔业”变更为“养殖的渔业”,第六类免許渔业新设为“水面专用捕捞”是非常重要的变动。

对此,通过具体的各类渔业许可证名称可进行确认,参考1911年8月5日《官报》第281号收录的内容可以知道其内容。下面对官报上收录内容的原文进行介绍。但是,由于之后随着新渔具和渔业的发展,各许可证的渔业种类有所增加,因此,虽然公告上的名单有所变动,但我们以最初公布的资料来进行说明。

以下内容旨作为参考信息,是为了帮助学习者理解根据许可证的种类如何区分渔具渔法的介绍。

首先,第一类免許渔业是指在一定水面建造或铺设渔具,在一定捕捞期内进行定置捕捞的渔业。第一类许可证渔业共23个,大敷网渔业、小敷网渔业、大台网渔业、小台网渔业、雉矢渔业、杖矢渔业、角网渔业、攀网渔业、落网渔业、櫟囊渔业、张网渔业、柱木网渔业、设网渔业、旺网渔业、抹杖木丝渔业、羽濼渔业、防廉渔业、渔箭渔业、叭渔业、圀堰渔业、遮簾渔业、遮网渔业、梁渔业等。作为参考,1909~1921年间新发放的第一类许可证渔业的比重约为60.4%,占相当大的比重。

由于这是陌生的、专业的渔具渔法用语,因此,我们把渔箭渔业作为第一类免許渔业的代表性案例进行介绍。关于渔具渔法的资料我们利用了水产联合会出版的“我国的渔具和渔法”。





第一类免許渔业（捕捞许可证）中具有代表性的渔箭渔业是朝鲜时代也使用过的传统渔具渔法。渔箭渔业是以鱼梁作为捕鱼的主要材料,在潮汐差异较大的海域,在退潮时露出水底或水深非常浅的地方钉上固定木条,用竹子编成的簾或撒网进行捕捞,被称为鱼梁类。涨潮时随潮进入的鱼类如同掉入迷宫陷阱,退潮时被困住无法脱身。

韩国过去曾铺设过很多用竹簾来制作迷宫,捕捉目标生物的竹防簾。作为第一类免許渔业的知名实例,我先简单介绍一下竹防簾(Bambooweir)。

如图所示,竹防簾是用竹子等编织簾形成栅栏(fence),虽然让鱼可以自由进入,但很难逃出去,切断鱼的退路进行捕捞。这是一种自古以来沿用的方法,在渔具的一部分上使用网状网眼,或者将一部分改装,使鱼类聚集在一起等,根据地区不同,翼网有各种不同大小或圆筒形等多种不同形态。

渔具主要设置在潮差大、水流大、浅水海域的滩涂上。首先在海底以一定间隔嵌入并安装翼网,使其呈V字形张开,在V字顶点相应部位铺设袋网。

入口通常设置在潮水进入的方向上,以便鱼沿着涨潮进入,当水退去时,就会抓住困在袋网里的鱼。过去像现在一样,因为在袋子部分不使用渔网,主要使用竹子编簾,因此被称为竹防簾。

每天两次在退潮时用袋网捕捞袋中聚集的鱼,退潮时如果是水深的情况也会使用小船。根据木材的寿命,每5年更换一次渔具,每月作业25天左右以归置渔具。一般在3~12月,在西、南海岸滩涂进行竹防簾捕捞,捕捞物平均为鳀鱼约80%,其他约20%。从竹防簾中获得的鳀鱼,通常也被称为竹防鳀鱼。

第二类免許渔业分为四种,鱼类养殖业、甲壳类养殖业、藻类养殖业、杂种养殖业。作为参考,1909年至1921年间根据新规获得申请许可的第二类免許渔业整体占比最小,约为3.3%。

第二类免許渔业的代表性例子有紫菜养殖、网箱养鱼。即在可划分的地方设置养殖渔场进行养殖。这是一种利用分区(类似土地分区)对目标物实现专属所有的方式。因为紫菜养殖不需要使用复杂的渔具捕捞方法,大家以常识进行理解即可,在此不再赘述。







第三类免許渔业有地曳网渔业、挥撻网渔业、船曳网渔业、鲷地漕网渔业、濑曳网渔业、藻曳网渔业六种。第四类免許渔业有敷网渔业、待网渔业、防陈网渔业、曲建网渔业、碇船网渔业、防御网渔业、建干网渔业、挂网渔业八种。作为参考, 1909年至1921年间根据新规获得申请许可的第三类免許渔业整体占比约18.9%, 位居第二, 第四类免許渔业占比7.0%。

第三类免許渔业是在一定的捕鱼时段内, 在海边的某个地方反复拉网的捕捞行为, 即通过曳扬或曳寄渔网进行捕捞。曳是拉、拉拽的意思, 扬是向上扬起的意思, 第三类免許渔业大体上是指用拖网围住鱼群后拉网围捕渔获物。

简单来说, 就是用渔网围住具有成群游动特性的鲹鱼、青花鱼、沙丁鱼等鱼群, 将网拉向陆地进行捕捞的捕捞方法。现在鲹鱼权现网和船引网非常相似。渔具渔法属于专业用语, 所以各位只需要理解其大意即可。

第四类免許渔业是指在固定的捕捞周期内, 在一定范围的水面重复搭建或铺设渔网进行捕捞的渔业类型, 其典型的作业方式是挂网捕捞。挂网渔业主要用于捕捞黄花鱼, 它是一种设置在海面深入陆地的渔网。是一种沿黄花鱼群洄游路径布设渔网的捕鱼方式。目前, 仍以鮫鯿网和地引网的形式存在。

第五类免許渔业包括饲付渔业、鰯渍(即, 魮鰯)渔业、筑矶渔业三种。第五类免許渔业是指将人工浮鱼礁建在海上, 并拽钓或者诱钓聚集在这里的鲹鱼、魮鰯、金枪鱼、鲛鱼等洄游性鱼类的一种渔业类型。实际上, 在殖民地时期几乎没有使用过这种捕捞方式, 1913年至1921年间实际申请获得作业许可的这类渔业记录为零。

最后, 第六类免許渔业包括三种类型: 捕介(采集甲壳类)专用渔业、采藻专营渔业、网渔专营渔业。换言之, 从第二类免許渔业中删除的‘捕贝采藻’被归类为第六类专项渔业的捕贝专营渔业和采藻专营渔业。至于这意味着什么, 我们将在下一次课中详细讨论。作为参考, 1909年至1921年间根据新规获得申请许可的第六类免許渔业的比重约占10.3%。

本节课我们了解了渔业令的执行情况。下一节课, 我们将对引进专用渔业权及其意义进行探讨。





#### 4-4 专用渔业权的引进及意义

上一节课我们了解了渔业令的执行情况。本节课我们来看看专用渔业权的引进和意义。

本规定涉及第六类免許渔业的法律条款与各位所看到的画面相同。

概括起来,最大的差异是,第一,1911年《渔业令》的第6种免許渔业是《渔业法》下属于第2种免許渔业的采藻、捕贝进行了单独的分类。在上一讲中,旧韩末期韩国水产志的记录中也可以确认,采藻曾被私占和总有,但捕贝主要在村民专用的村前渔场进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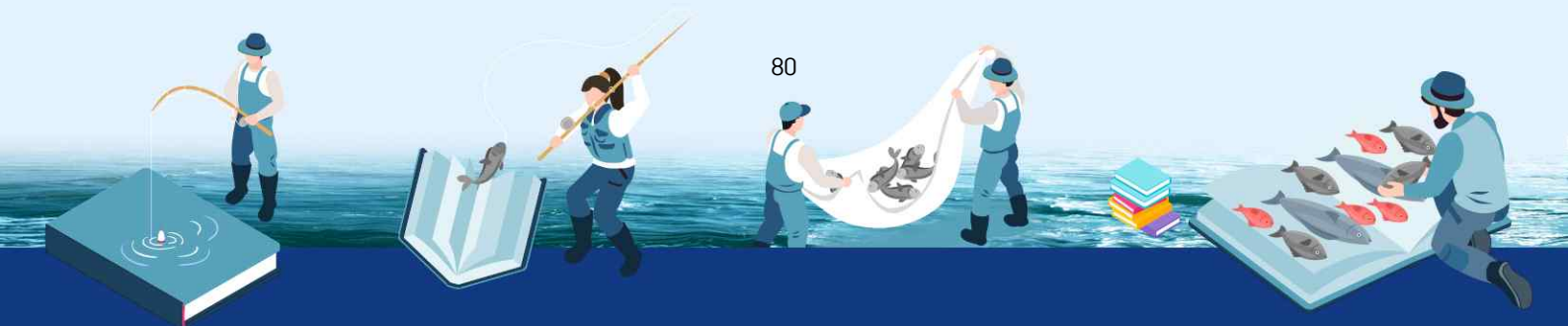
第二,第六类免許渔业的主要特点,渔业权只授予渔业共同体(渔业团体),而不是个人,这是与以往法律一个非常重要的区别。也就是说,不是根据实际支配力由个人先占,而是只有共同体才能占有和管理共享资源,这是以前不存在的制度。特别是第六类免許渔业的渔业共同体,应当附具渔村经营或养护规划文件,这也是非常重要的变化之一。

我们详细了解一下专用渔业的引进。专用渔业最初是日本《旧渔业法》中首先使用的术语。这里的《旧渔业法》是1901年明治34年日本制定的第一个《渔业法》。简单说明的话,该法由全文35条组成,是日本最早引进渔业权制度的基础。此后《旧渔业法》于1910年修订为全文65条的《明治渔业法》。

再回到专用渔业,专用渔业是指日本传统的渔业,即在封建领主制度下,接地渔场立足于村庄总有的概念,对渔场进行排他性管理和维护。以旧有惯例或惯行的名义维持的渔场使用关系通过《明治渔业法》被合法化为专用渔业权。

其意义是之前以封建领主为中心,根据实际控制所维持的前近代渔场利用关系在进入近代后,国家介入其中,首先意味着国家通过法律制度赋予共同体权利并控制其权利,可以视为将其转变为近代形态。

大韩帝国时期的《渔业法》和殖民地朝鲜的《渔业令》都是以日本的《旧渔业法》和《明治渔业法》为基础制定的。但是有引进专用渔业的差异。关于区分《渔业令》和《渔业法》的主要特征是第6种免許渔业,即引进专用渔业,我们现在来看下之前研究对它的历史评价。





首先,在《渔业法》中遗漏了专用渔业的规定,没有立即适用,这是因为日本立场要尽早完成殖民地掠夺结构。这种观点的重点是《渔业法》中缺乏对专用渔业的规定,这导致了这一时期应该与朝鲜沿岸渔民共享的主要渔场让给了进入朝鲜的日本渔民的结果。

这些研究注意到,在引入近代渔业制度的同时,没有将渔业所有制惯例的核心——地先渔村和地先渔场的村庄所有制纳入《渔业法》这一新的法律制度,而是置之不理。这些主张的前提是朝鲜时期存在传统的以沿海渔业为基础的渔业共同体。也就是说,“渔业共同体”的存在有非常核心的价值。

另一个观点是,专用渔业制度的主要目的是为了日本移民渔业者在朝鲜的定居,将已经在日本实行的制度以设立组合的形式引入到朝鲜是重要因素。另外,在引进渔业组合时,还考虑到了行政方面,要使组合实际上作为国家管理渔业制度的实际主体发挥作用。

上述专用渔业制度和组合设立规定,应称为近代渔业权制度的核心。换句话说,对于渔场来说,以传统的私人所有权制度和税收制度为基础的无主物抢占,即在之前自由准入体制的惯例中,随着渔业权制度的引入,向以共同体为基础的近代所有制度过渡是非常重要的因素。因此,在讲座中,我们将用批判性的视角来观察之前研究对专用渔业制度的研究论点。

首先,大韩帝国《渔业法》适用时期,因推后处理专用渔业制度,渔业权被日本人掠夺,这一点多少有些难以接受。在殖民地朝鲜,日本人的渔业生产力的增加及其比重较高的事实已经在总督府统计上得到了证实。但是根据《渔业令》引进第6种免許渔业,以及对渔业组合赋予渔业权,实际上很难认为对殖民地的渔业掠夺产生直接影响。

首先,在1909年至1921年间,第六类免許渔业共获得许可证924件,仅占总许可渔业的10.3%,推测主要渔业者大部分不是日本人,而是朝鲜人,由以地区为基础的渔业者组成。这是主要反驳之一。

而且正如在上次讲座中了解的那样,传统上在朝鲜使用地先渔场大致分为以定居性水产资源为对象的采藻、捕贝业、以移动性水产资源为对象的定置性渔具和利用移动性渔具的渔业等三个部分。

特别是作为专用渔业制度对象的采藻、捕贝业的渔场,以岛屿周边的渔场附属于土地的形式,从以前开始就发现了以两班的实际支配力为基础的事例,像这样专用渔业对象渔场也已经存在多种所有关系。





第二,定置性渔具通过立案保障了渔场的私人所有权,但移动性渔具允许生产手段的所有者自由接近包含水产资源的远海,因此排他性和垄断性权利没有得到保障。也就是说,在朝鲜,从惯例上看,地先渔场这一法律概念在所有权和资源管理的制度层面上并不存在。

鉴于此,笔者认为,有关通过《渔业令》设定专用渔业的讨论,与其集中于以往研究中指出的殖民者日本人侵占朝鲜传统渔业的行为,不如着眼于其实质内容,即专用渔业规定的内容本身。

下表是对日本和朝鲜专用渔业的相关规定进行比较。殖民地朝鲜实行的《渔业令》中第6种免許渔业的范围是采藻、捕贝、网鱼专用渔业,其范围与日本相比非常狭窄。

作为参考,我们来看一下日本最早的近代渔业法《旧渔业法》。本法于1901年制定颁布。《旧渔业法》由专门的35条组成,将整个水面视为公有水面,在日本引入了渔业权制度。

免許渔业分为定置渔业权、划区捕捞权、特殊捕捞权、专用捕捞权等四类,而近海或大洋性捕捞则属于自由捕捞。特别是对村前海域的地先渔场纳入免許渔业,立足于渔场总所有制,由渔场渔业从业者实行连带责任制,在远海进行的捕鱼以入会作为惯例,将其原则法制化。

在日本《旧渔业法》中,指利用地先渔场的免許渔业中,专用渔业的范围是定置、分区、特别渔业权渔业以外的水面专用渔业,在接地及邻近水域以海带等定居性水产动植物为对象的渔业。即日本通过《旧渔业法》将地先渔场的定居性水产动物设定为专用渔业的对象,以向直接使用者颁发许可证为原则,将共享资源的总有首次通过法律实现了制度化。

1910年修订《旧渔业法》的《明治渔业法》包含了大幅扩充专用渔业的对象和范围的内容。首先,将现有的地先专用渔业更名为联合渔业,分为第一至第五类联合渔业。其中还包括近岸海域的网具、垂钓等地先渔场进行的渔船捕捞,共同渔业权的所有主体优先考虑渔业组合。

《明治渔业法》下渔业权制度所涵盖的专用渔业即联合渔业范围村前地先渔场较以前更为广泛,所有主体渔业组合从地先渔场进行总有,是渔场全面利用、管理的主体。

殖民地朝鲜的《渔业令》中专用渔业的范围如何?专用渔业在《渔业令实施细则》第十七条中定义为“除前款所列外,在专用水面进行的渔业”,细分为采藻专用渔业、采贝专用渔业和网渔专用渔业3类。







1901年制定的日本《旧渔业法》的专用渔业中新包含网渔专用渔业的形态。也就是说,虽然比日本的《旧渔业法》有所扩大,但比《明治渔业法》范围更狭窄,渔业共同体的管辖范围仅限于《明治渔业法》的一部分。

这种殖民地朝鲜的专用渔业制度的引进反映了之前实施的以《韩国水产志》为代表的全国性渔业实态的事先调查。

其理由第一,正如《韩国水产志》记载的那样,旧韩末期大部分在渔村前地先渔场进行的采藻和采贝以共同渔业经营,这种方式共同渔业活动是即使海带田采藻场有特定所有权主体也一样的。

当然,传统上被称为藿田的经济价值很高,与土地相似,是个人私有的采藻场,其使用者的范围即使扩大到附近,但也只是一部分特殊情况。

第二,以渔箭为代表的定置性渔业,私人所有实质上发达。因此,将其纳入地先渔场的范围,伴随着引起既得利益者反对的危险性。

最重要的是,如果沿岸地区的朝鲜渔民以与日本《明治渔业法》相同的水平独占村庄前海,实际上与最近移居的日本移民渔业者的捕鱼权相冲突也是主要考虑事项。

即,在殖民地朝鲜共同收益共享资源的渔业,日本根据《旧渔业法》移植了已经实行的专用渔业制度,其范围是通过《韩国水产志》等全国性渔业实态调查结果和当时日本渔业者移居朝鲜的方针,考虑到部分渔业限制性引进的。

但是与日本的不同之处在于,与日本的《明治渔业法》相比,缩小了专用渔业的范围,在《旧渔业法》的专用渔业的对象“采藻、捕贝”中追加扩大了《明治渔业法》的一部分“网鱼专用”,有可能连流动性水产资源也包含在专用渔业的对象中。

像这样在殖民地时期的朝鲜,共享资源的法律制度化不仅限于海洋。同样的方式也适用于森林。1911年颁布并实施《森林令》,与渔业中的第六类许可渔业专用渔业相似,明确了“入会惯行”。“入会惯行”是近代日本发展起来的总有制方式,是在殖民地朝鲜通过“森林令”正式创造的制度。







当时在朝鲜，森林因为是传统的无主空山，即自由准入的惯例而荒废。为了打破僵局，总督府引入了在日本实行的“入会惯行”作为规范。也就是说殖民地时期朝鲜总督府对森林、渔场等主要共享资源制定制度管理体系，其方式是通过移植已有的日本实施的制度来构建的。共享资源的管理主体与渔业一样对共同体十分关注。

但是，其实施范围反映了朝鲜的现实，并没有完全移植日本的制度。在渔业方面，殖民地朝鲜专用渔业的对象和范围比日本的《明治渔业法》要窄，而且对于根据《森林令》入会惯行的创建，相对于日本在民间森林成立，而殖民地朝鲜则仅限于国有森林更是说明了这一点。

下面就渔业组合作为第六类免許渔业的渔业权主体的作用进行探讨。在渔业令中，第六类免許渔业的总有渔场范围有限，因此，对他们具有优先渔业权的渔业组合的作用也应该在法律上缩小，但相反，渔业组合的作用比这有更广义的范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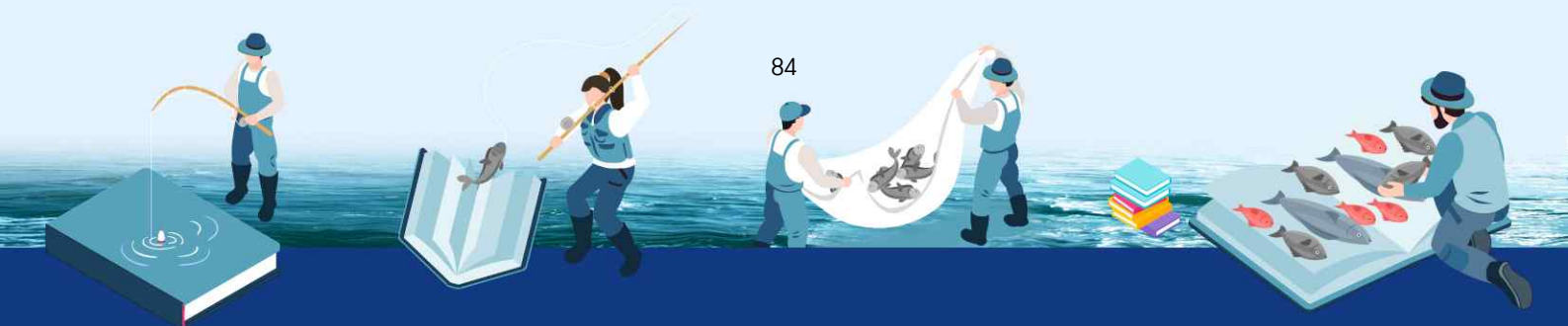
根据1912年4月与《渔业令》一起发表的《渔业组合规则》第6条，“组合在有设立许可时成立。组合成立后，居住在本地区的渔业者必须加入本组合”，对本地区渔业者强制加入作出了规定。渔业组合实际上与在日本实施的《明治渔业法》的渔业组合具有相同的作用。

这种差异也成为将渔业组合作为第六类免許渔业的专用渔业的渔业所有权人和作为管理当地渔业的一种统治行政主体的渔业组合混为一谈的原因。因此，许多研究者将渔业权制度和掠夺评价为同一性质。

当然，在日本已经实行的渔业组合作为支援定居在朝鲜的日本移民渔业者的窗口，对定居起到了积极的作用。同时，渔业组合在国家委任下，似乎也起到了管理殖民地时期渔业制度的实质性行政主体的作用。

例如1929年引入的指定组合制度很好地代表了这一点。指定渔业组合是“为了促进组合的稳健发展，必要时由朝鲜总督指定的组合”，指定组合是以道知事任免理事并指定其工资的形式运营的。从这个角度讲，《渔业令》最早出台的第六类免許渔业和渔业合作社条例，也不能排除渔政掠夺性殖民化观点。

但笔者认为，第六类免許渔业的设置本身应从本质上进行探讨，即形成依法界定渔场总有的渔业所有权制度。从制度上讲，第六类免許渔业未赋予个人渔业权，并且在申领许可证时，第一类至第五类免許渔业未要求的《渔村经营或养护规划》，必须作为附件提交，这是一个需要重新评估的因素。





本节课就引进专用渔业权及其意义进行了探讨。下一节课,我们将通过孟骨岛渔民的事例,了解《渔业法》中渔业权制度和以后《渔业令》中引入专用渔业权制度后,现有共同体渔业的变化过程。



#### 4-5 渔业法的适用和渔民的生活：专用渔业权和共同体渔业（孟骨岛案例）

上一节课,我们研究了专用渔业权的引进和意义。本节课以《渔业法》的适用和渔民的生活为主题,通过孟骨岛渔民的事例了解一下随着专用渔业权的引进,渔业共同体的变化情况。

上述「渔业令」的主要特点之一是随着第六类免許渔业的引入,共同体所有权被创造出来,接下来将为大家介绍在这之后传统私自占有的主体和殖民地时期‘总有’主体之间的渔业权纠纷案例。希望借此提高大家对殖民地渔业权制度和共同体渔业的理解。

总结上一讲的核心要点,专用渔业在现有的1908年「渔业法」中被列为第二类免許渔业,在此之前是可以授予个人捕捞权利的但是,随着通过「渔业令」设置了专用渔业权,与此同时村前沿岸渔场的采藻、捕贝在法律上只将此权利赋予渔业组合或渔业共同体,这是最核心的变化。举一个最真实的事例,让我们来看一下关于孟骨岛的渔业权所有关系的变迁。

孟骨岛的渔业权相关内容参考的史料是收录在『古文书集成II-海南尹氏家I』中的海南尹氏家古文书。该资料是海南尹氏家族保存下来的,收集了从朝鲜后期到1920年代中期,围绕海南尹氏家族孟骨岛的所有权行使和当地居民抵制征税等过程中制作的各种文件。利用该文件进行研究的学者有安胜俊、李钟吉、郑允燮、金贤英(音译)等。

孟骨岛是位于全罗南道珍岛西南方向五十三千米远的一座海上岛屿。海南尹氏家曾是‘在地土族’,而孟骨岛早早地被海南尹氏家私自占有并由其接手管理。

据史料记载,通过已有文件很难证明孟骨岛归海南尹氏家所有,但1687年3月上传的丁卯年三月制作的‘所志’中承认了孟骨岛从尹孝贞时期开始就归海南尹氏家所有,由此,孟骨岛从朝鲜王朝的祖先时期起就被认定为海南尹氏管理的岛屿。

至此,孟骨岛的岛民每年向海南尹氏家缴纳租赁缴纳賭稅,即租赁佃租的关系持续了约400多年。换言之,海南尹氏家族长期以来都是孟骨岛的实际所有者以及实权掌控者。但随着1908年「渔业法」的颁布实施,这种支配关系被迫发生变化。







首先,需要取得渔业权才能实现对孟骨岛沿岸渔场的专属利用。换言之,在「渔业法」出台之前,岛屿附近的渔业权依附于土地,并没有与渔业相关的单独所有权。

然而,随着20世纪近代法律制度的引入,渔业权被视为与土地所有权无关的权利。为此,尹定铉于1911年11月6日申请并取得孟骨岛沿岸渔场的第二类的采藻专项渔业的许可,注册申请了第1344号的个人所有许可证。

海南尹氏家族是否以孟骨岛周边沿海为申请对象取得了除第二类的采藻专项渔业许可以外的其他渔业权无法通过『古文书集成II-海南尹氏家』这份史料证实。这是因为该材料具有在与渔业权相关的纠纷过程中收集的目的和特征。

另外,在之前的课上也多次提到,随着1908年的「渔业法」修改为1911年的「渔业令」,与此同时,根据新引进的‘专用渔业制度’,此前的第二类免許渔业中的采藻专项渔业有必要变更为第六类免許渔业。

如果海南尹氏家族拥有第六类免許渔业以外的其他渔业权,那么从法律上看,尹海南家族作为个人合法取得是没有问题的。因此,不存在会发生纠纷的情况,也就没有收集资料的必要。但是他们想要取得的渔业权正是第六类免許渔业的许可。

无论如何,根据1908年的「渔业法」,过去实际上拥有和控制着岛屿周围的采藻渔场渔业权的海南尹氏家族可以登记为合法的渔业权持有人。

然而,五年后的1916年12月21日,渔业权的执照期届满,根据当时修订的「渔业令」,采藻许可只能按‘总有’的形式申请获得,无法为个人颁发所有权许可。尹定铉以相同内容申请第二类采藻免許渔业权期限延期更新,但遭到拒绝。此外,他也以个人许可的方式申请了同一渔业权的第六类免許渔业的许可。

在此过程中,海南尹氏家的尹定铉为了取得第六类免許渔业的许可,另外制作并递交了400年以来海南尹氏家的孟骨岛归属关系凭证以及孟骨岛居民请愿书,请愿内容是“在尹氏家族的帮助下我们生活得很好,尹氏家族很照顾我们,请允许尹氏家族获得(渔业权)许可,让下面受雇做事的人能维持生计,这对我们来说反而很幸福”,但最终被驳回,原因是第六类免許渔业的渔业权许可不得赋予个人。







这个案例可以真实地窥见20世纪初，在引进近代法律制度的过程中，掌控渔场实权的两班具备的渔业权法律意识。他们不仅缺乏对渔业权许可制度的认识，也缺乏对近代法律及其配套制度的严格性认识。

在此我想要强调的是，在「渔业令」背景下，尽管实际渔场主努力维护了自古以来400多年的专用渔业的渔场所有权，但实际在法律制度上个人所有权被否定，只有‘总有’集体所有权得到认可，这才是关键。

最终，海南尹氏家族的尹定铉以一种新的免許渔业许可申请形式，即由四十二名居民联名盖章提出申请，李应先和尹柱亨作为申请代表，最终退而求其次以此获得第6973号的第六类免許渔业的许可。

现在看到的资料是关于海南尹氏拥有的孟骨岛专项渔业权的『官报』刊登内容。尹定铉拥有的第二类免許渔业第1344号于1916年11月5日到期，之后于1918年5月20日被批准为第六类免許渔业。当时渔业权不是尹定铉个人所有，而是以‘总有’的形式存在，即孟骨岛里的采藻从业人员的地区渔业从事者集体所有。至少在形式上，专用渔业权的归属呈现‘总有’形式。

根据「渔业令」的要求，将过去岛屿所有权的实际持有者和岛屿居民一并记录，岛屿所有权持有人被设定为共同渔业者，但从过去一直沿袭而来的所有权关系并没有立即被否定。

根据明治四十五年签订的孟骨岛及其附属岛屿竹岛、藁岛的使用受益权的合同，能看到明确规定的上缴内容：藁26支4捆价格为254日元，牟（大麦）17石15斗、石花菜1,100斗价格为44日元，干鱼13捆4件、鲍鱼250个、斗八里醢（海蜇酱）4罐、毛海衣（紫菜的一种）200捆、海衣30捆、鱼油5斗等等。这种在渔村被默认的约定俗成的所有权关系尽管很微弱，但一直存在并延续到殖民地时期的1930年。

该资料是1935年10月16日刊登在东亚日报上的关于孟骨岛岛民生活困难的地方评论。主要内容是孟骨岛岛民们的诉苦，表示他们背负着过高的佃租负担。文章称，该地的居民是居住在海南郡的某氏的佃户，田地租佃费的征收方法是在秋收期将实物收成成分成两半，并单独再缴纳土地租金。

此外，收取的东西还包括：大麦17石7斗5升、甘藁55捆、馱藁7捆、沙鱼14捆、鲂鱼300尾、鱼油5斗、石海衣30捆、海蜇酱4罐，总价达到483韩元70钱。换言之，孟骨岛民的佃租中仍然包含缴纳海鲜水产品的内容。这种约定俗成的所有权关系一直延续到1935年。





这里值得注意的是，尽管按惯例沿袭而来的所有权关系没有消失并持续存在，但渔业的所有权归属发生了变化。换句话说，根据「渔业令」四十二名岛民依法成为了共同渔业权的所有者，掌握支配实权的海南尹氏家族被记为证明人之一。

孟骨岛的案例是至少在形式上体现了从个人所有转变为‘总有’集体所有的典型事例，在过去，依靠实力就可以将附属于土地的岛屿等渔场的所有权据为己有，但随着近代化渔业权制度的引进，这种情况发生了转变。

尤其在当时，情况类似的第二类采藻专项免許渔业期满案例达三十三起，涉及第1328 ~ 1345号，它们与孟骨岛一样属于同一性质的渔业权。虽然他们之后是否取得了第六类免許渔业的许可还需要进一步研究，但可以推测出它们的过渡方式与孟骨岛相似。从这个意义上说，「渔业令」第六类免許渔业专用渔业制度可以看作是引进‘总有’集体所有制的开端，通过它将渔业权利转让给了共同体。

本次课对引进近代渔业所有权制度的一系列过程进行了讨论，并通过案例分析确认了只有渔业共同体才能获得渔场的‘第六类免許渔业’许可，即确认了专用渔业制度的引进对实际渔场的所有权关系产生的影响。

殖民地时期建立了近代森林所有权制度，并创造“入会惯行”的形式，同理，渔业也通过「渔业令」的‘专用渔业制度’发展出新的形式，即将渔业权赋予实际从事渔业的共同体。

综上所述，殖民地时期引入的渔业权制度以日本的渔业法为前身。旧韩末期引进的「渔业法」是第一个与渔业相关的渔业基本法，确立了免許（许可证）、许可、申报的框架。

该法在殖民地时期实施三年后的1911年被修订为「渔业令」，主要修订事项是第六类免許渔业和渔业组合设立，通过相关规定在朝鲜境内强制规定渔业权归共同体集体所有，即推动实现专用渔场“总有”制的法制化。其目的在于整改不仅是渔业，还有森林等殖民地时期的共有资源的一系列所有权制度。

但是「渔业令」中规定的专用渔场范围仅限于采藻、采贝、网鱼专用渔场的一部分，与日本的渔村集体化相比，在村前沿岸渔场进行的大部分渔业的范围都较小。换句话说，它不包括一直以来被默许的定置渔具私有制。





据判断,这综合考虑了定置渔具私有制发达的朝鲜传统渔业状况和日本实行的日本渔民移居朝鲜的政策。尤其是后者还曾作为渔业权制度意在掠夺渔业的主张的依据,因此在这其中对专用渔业制度本身的评价相对不足。

在本次课上对于殖民地时期引进的专用渔业制度,我们没有单纯地将其视作殖民时期的掠夺工具,而是从法律上定义‘总有’渔业所有权制度的形成角度进行了探讨。

而海南尹氏掌控孟骨岛的案例也需要从这方面重新解读。换言之,传统的视角是将渔场视为土地附属产物,然而由「渔业令」可知,渔场完全转变为与土地分离的所有权客体,并确立了法律原则,使渔场的所有权不再归土地所有者,而是归实际从事渔业的人们所有,这一点具有历史意义。

这确立了以共有为基础的渔业所有权制度的建立,「渔业令」第六类免許渔业的引进作为将渔业权利转移给集体的一个开端,我认为应重新对其进行评估。作为参考,殖民地时期的第六类免許渔业后来在1953年修订为共同渔业,1963年修订为第一类至第三类共同渔业,1995年修订为乡村渔业,并延续至今。

在下次讲座中,我们将以引进近代渔业法和渔业权所有变动为主题,通过渔业权统计资料,根据近代渔业法渔业权的颁发和处置来对所有权变动的情况进行考察。第四堂课就此结束。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01** 한국에서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성립한 것은 식민지기이며, 「(        )」과 「(        )」을 기본법으로 한다.  
10분

**정답** 어업법, 어업령

**해설** '근대적 어업권 제도'는 어업법과 어업령을 기본법으로 합니다. 동 법을 통해 배타적으로 사점된 연안의 어장 혹은 자유접근이 가능하던 어장에 대해, 일물일권(一物一權)적 권리관계가 법정됨과 동시에 국가가 그 소유권을 부여하였습니다.

**02** 어업권의 종류로 (        )은 연안어장의 배타적 점유관계를 구분는 것, (        )은 근해 어업의 이용에 대한 진입 제한 및 허용을 규정하는 것, 신고어업은 자연자원의 총량 훼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생계형 어업에 한하여 어장의 자유로운 이용과 관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0분

**정답** 면허어업, 허가어업

**해설** 면허어업권은 어장에 대한 설권행위의 배타적 보장, 허가어업권은 국유어장에 대한 허가 이용을 의미합니다.





### 03 「어업령」하 면허어업의 종류와 그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면허어업 중 제6종 면허어업이 가장 배타적이다.
- ② 제2종 면허어업은 기존에 태전으로 일컬어진 것을 면허한 것이다.
- ③ 제1종 면허어업은 일정 수면에 어구를 건설하거나 부설하여 일정한 어업기간 동안 정치(定置)하는 어업 대표적 예로서 어전어업이 있다.
- ④ 제4종 면허어업은 일정 수면에서 일정 어업기간 반복하여 어망을 건설(建設) 또는 부설(敷設)하여 행하는 어업으로 대표적으로 회유하는 조기어군의 경로를 따라 어망을 설치하여 어획하는 어구어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답 ①

**해설** 면허어업은 제1종, 제2종 면허어업이 가장 배타적이며, 제3~6종 면허어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배타성이 요구됩니다.

### 04 식민지 조선의 전용어업제도는 일본의 「구어업법」과 「명치어업법」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이식한 것으로, 「명치어업법」보다 전용어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O/X)

10분

정답 X

**해설** 식민지 조선에서 공유자원을 마을단위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익하는 어업의 경우, 일본이 「구어업법」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전용어업제도를 이식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의 「명치어업법」보다 전용어업의 범위를 축소해서 적용하되, 「구어업법」의 전용어업 대상인 '채조, 포패'에 「명치어업법」의 일부인 '망어전용'을 추가로 확대하여 이동성 수산자원까지 전용어업의 대상으로서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특징입니다.





**05** ( )은 '조합의 건실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조합'으로서, 도지사가 이사를 임면하고 그 급료를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0분

**정답** 지정어업조합

**해설** 지정어업조합은 '조합의 건실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조합'으로서, 지정조합은 도지사가 이사를 임면하고 그 급료를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업령」에서 최초 도입한 제6종 면허어업과 어업조합규정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어업수탈론적 시각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 주제

맹골도 어업권과 관련한 분쟁 내용을 정리하고,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의 변화 중 어떠한 요소가 공동체 어업의 소유관계 변천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현대의 어업권 제도에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서술해 보세요. (60분)

## 참고

어업권 제도는 구한말 「어업법」에서 식민지기 「어업령」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징적인 제도적 변화는 전용어업의 신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서 특정 공유자원의 경우 그 권리를 공동체로 이양하는 총유제도에 대해 보다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의 소유제도로써 “총유”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 현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특히 공유재의 비극, 즉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써 전용어업제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정리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 오창현 (2011), 「일본 '地先漁場 地元主義'의 성립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중앙민속학』16, 85-107.
- 이종길(1997), 「朝鮮後期 漁村社會의 所有關係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제Ⅴ장 한말·일제초기 어촌사회의 소유관계)
- <https://www.youtube.com/watch?v=D1xwV2UDPAg> (지속 가능한 지구: 공유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노벨상 수상자 엘리노어 오스트롬)

